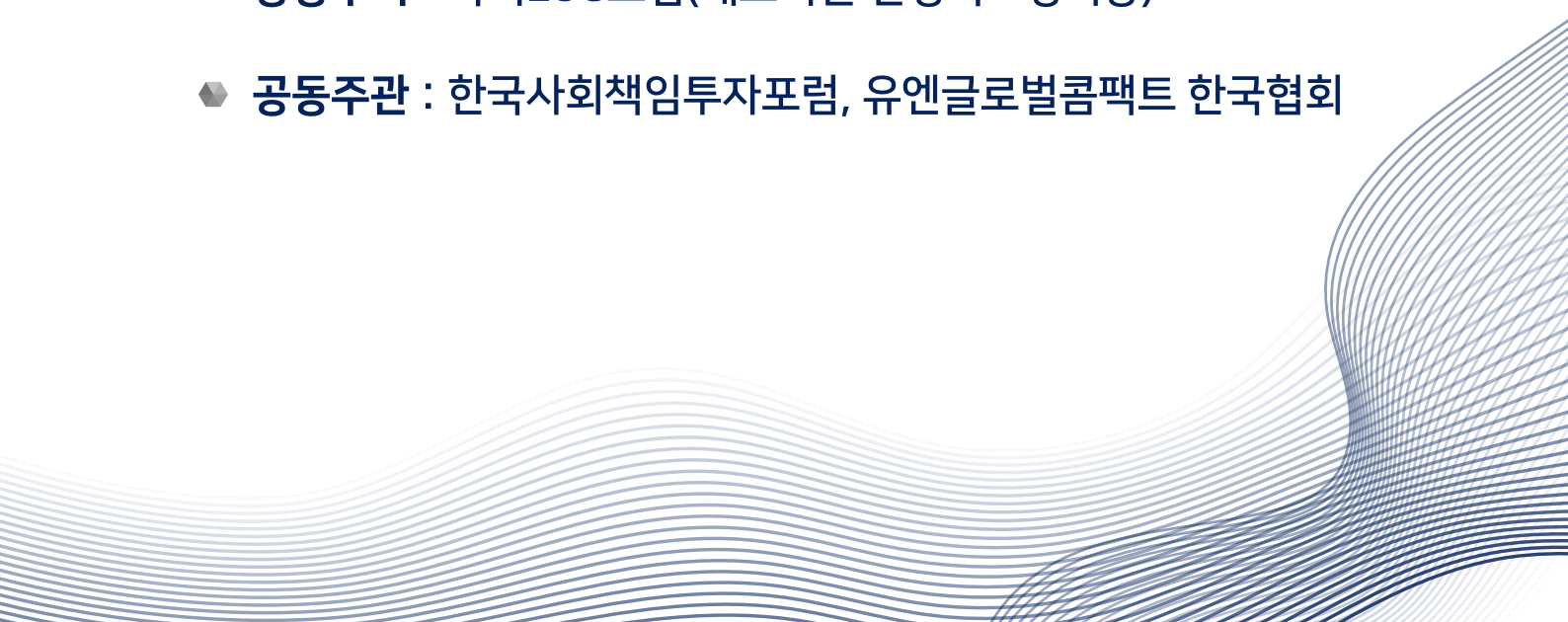


자료집

국회ESG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

- ◆ 일 시 : 2024년 10월 2일(수) 14:00
 - ◆ 장 소 : 국회도서관 강당
 - ◆ 공동주최 : 국회ESG포럼(대표의원 민병덕 · 정희용)
 - ◆ 공동주관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프로그 램

국회ESG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

사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순서	시간	구분	내용
Session1 발족식 (90')	14:00~14:05	안내	진행순서 소개 및 국민의례
	14:05~14:15	개회사	민병덕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희용 대표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14:15~14:25	환영사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14:25~14:35	사진 촬영	기념사진 촬영
	14:35~14:55	축사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14:55~15:05	인사말	포럼 참여 의원
	15:05~15:15	포럼 소개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소개>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
	15:15~15:30	발표	<제22대 국회 ESG포럼 정책 아젠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Session2 토론회 (105')	15:30~15:50	발제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기본법'>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
	15:50~17:05	토론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좌장>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 실장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장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정보분석센터장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17:05~17:15	종합토론	발제자 및 토론자
	17:15~	폐회	폐회 및 정리

목 차

I 인사말

개회사 민병덕 대표의원	2
개회사 정희용 대표의원	4
환영사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6
환영사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	10
축 사 우원식 국회의장	13
축 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15
축 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7
축 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19
축 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1
축 사 김완섭 환경부 장관	23
축 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25

II 발족식

국회ESG포럼 구성의원	28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29
제22대 국회ESG포럼 정책 아젠다	39

III 토 론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기본법’	50
좌 장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패 널1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62
패 널2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63
패 널3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장	65
패 널4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장	73
패 널5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정보분석센터장	82
패 널6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86

I

인사말

- 개회사 | **민병덕** 대표의원
- 개회사 | **정희용** 대표의원
- 환영사 |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 환영사 |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 축 사 | **우원식** 국회의장
- 축 사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축 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축 사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축 사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축 사 | **김완섭** 환경부 장관
- 축 사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ESG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민 병 덕
대표의원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국회ESG포럼’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환경과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많이 고민해 오신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발족식과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ESG포럼’은 제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한 분씩 공동대표를 맡아 ESG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의미 있는 정책과 제안을 실제 제도 개선과 법적
근거 마련의 성과로 잇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저 민병덕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각각 공동대표를 맡아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는 어땠습니까? ‘절기 매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추석 연휴
지나서도 한낮 무더위는 계속됐습니다. 그런데도 올여름이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는 농담은, 농담이 아닌 곧 우리에게 닥칠 무서운 예언처럼 들립니다.

이는 매년 눈에 띄게 올라가는 여름 기온과 잦아진 폭우, 폭설, 태풍 등 기상
이변, 작물 재배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를 국민 모두가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간 생존을 위한 경제 활동을 단 한 순간도 중단할 수는 없기에,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슬기롭게 조화할 ESG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국회ESG포럼’을 특정 정당을 넘어 여·야의 통합적 정책과 아이디어를 모으는 특별한 요람으로 이용하고자 노력하는 까닭입니다.

오늘 발족식은 제22대 국회에서도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이 그 뜻을 더욱 열의를 가지고 이어가겠다는 결의의 자리인 동시에, 우리 포럼의 아젠다가 무엇인지,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기본법’의 내용과 제정 방향이 무엇인지를 함께 논의하는 토론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날만큼 공동대표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 패널의 발표를 경청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부터 ‘국회ESG포럼’과 함께해 주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님과 UN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 반기문 명예회장님, 이동건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와 연구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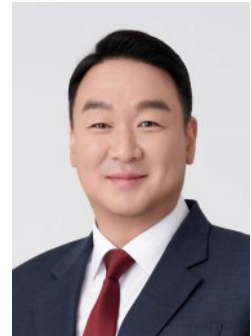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일

대표의원 민 병 덕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의원이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ESG 포럼 공동대표 정희용입니다.



정 희 용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님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아
<국회 ESG 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여 ESG 생태계 조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함께
포럼을 준비해 주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리며,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SG는 전세계적으로 경제·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패러다임이 되어가고 있으며,
주요국들과 국제기구도 ESG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차원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전 세계
에서 통용이 가능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유럽과 미국 등은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흐름에 따른 국내 ESG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기반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ESG와 관련한 정책이 규제

중심으로 구성이 되면 사회·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규제보다는 지원 방향에 중점을 두어 변화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균형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정부, 기업과 관련 단체 등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토론의 장도 필요합니다.

오늘 발족되는 국회 ESG 포럼은 국제적 추이와 동향을 살피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논의하고 제안하는 중립적인 플랫폼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발족식과 함께 첫 번째로 개최되는 토론회에서 참석한 기관과 전문가분들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일

대표의원 정 희 용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김영호입니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영국의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는 ‘그림의 힘’에 주목한 경제학자입니다. 사회적 기초와 생태적 한계 사이의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을 경제모델로 제시한 그녀의 ‘도넛 경제학’의 그림은 인류가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매우 직관적인 과제를 제시합니다.

그녀의 도넛 모양의 경제 모델 그림은 2015년 발표된 UN SDGs(유엔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논의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UN SDGs 설계자들이 그녀의 도넛 그림을 책상 앞에 놓고 토론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각각의 나라들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ESG’를 중심으로 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인 수단’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8년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을 시작으로 ‘금융의 관점’에서 ESG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의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SG 정보공개 의무화, 지속가능금융규제(SFDR), 그린 택소노미, 공급망 ESG 실사법 등은 대표적인 수단들입니다. 이러한 수단들은 이제 전 세계를 ESG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로 재편하는 스탠다드가 되었습니다. 각종 ESG 관련 법·제도·정책에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인권, 노동 등의 이슈는 무역장벽을

넘어 신무역질서 재편을 위한 강력한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성을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ESG 선순환 생태계라는 그림을 가장 먼저 그린 후 이를 위한 각종 법·제도적 수단들을 선제적으로 강구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진 나라의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처럼 ‘지속가능성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고, 법·제도·정책적인 수단들도 튼실하게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상하자 CSR로 몰려 갔고, CSV(공유가치창출)이 관심을 받자 CSV에 한 눈을 팔았고, 이제 ESG가 주류로 떠오르자 ESG에 대응하는 등 근시안적 태도 때문입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ESG 관련 법과 제도와 정책들은 과편적입니다. 시장에 ESG 촉진과 실행을 위한 충분하고도 강력한 동기를 주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ESG 선순환 생태계 관점에서의 입체적 고민 없이 국제적 이니셔티브나 유럽연합 등 해외 선진국 등이 내놓은 ESG에 수동적으로만 대응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하여 ESG,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후발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은 지금 ESG 경쟁력 저하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ESG 생태계의 핵심인 ESG 정보공개 의무화만 해도 올해 기준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적용시점, 적용대상, 공시위치 등은 오리무중입니다. 대전환기에는 한 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ESG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제22대 ‘국회ESG포럼’이 발족합니다. 포럼이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향심을 가지지 못해서, 긴 호흡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그리지 못한 ‘지속가능성의 그림’을 정교하게 디자인하고 이행 수단을 총체적으로 강구하는 일입니다. 즉 ‘ESG 선순환 시장 및 사회 생태계’라는 그림을 그린 후, 이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법, 제도, 정책적인 수단들,

즉 인프라들을 빠르게 구축해 나가는 일입니다.

‘국회ESG포럼’ 발족 기념으로 오늘 토론하게 될 ‘ESG 기본법’은 ‘ESG 선순환 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림’입니다. ESG 기본법은 기업(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공적금융, 민간금융), ESG 평가기관, ESG 검증기관, 소비자, 공공기관, 정부(중앙정부, 지자체) 등 다양한 ESG 시장 참여자의 ESG와 관련한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각 주체들이 ‘ESG 시장’에서 ESG 실행의 동기를 가지고 기대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ESG 컨트롤타워를 정하고 ESG와 관련한 중장기 계획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SG 기본법이라는 그림을 그려 놓고 보면 선순환 생태계 관점에서 보완해야 할 법과 제도 등이 보입니다. 케이트 레이워스가 말한 ‘그림의 힘’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 그림을 바탕으로 ESG 촉진에 필요한 규제는 만들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규제가 강하다면 지원 또한 전폭적이어야 합니다. 규제와 지원은 비례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여정에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민과 관이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ESG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회ESG포럼’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ESG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규제와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ESG포럼의 공동 대표를 맡아 주신, 민병덕 의원님, 정희용 의원님, 그리고 멤버로 참여해 주신 모든 국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국회ESG포럼의 공동 사무국으로서 포럼의 활동을 충실히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오늘 행사를 위해 발걸음 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0월 2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김 영 호**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유연철입니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올해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Who Cares Wins’ 보고서를 통해 ESG라는 개념이 세상에 나온 지 20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이러한 자리에서 국회ESG포럼의 공동 운영사무국을 맡아 환영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포럼 발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신 국회ESG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실 전문가 여러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논의의 장을 열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영상과 서면으로 축하를 전달해 주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님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김완섭 환경부 장관님, 김병환 금융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사회는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규범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과 같은 강대국들은 이러한 규범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경제적 힘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는 국제 정치 환경이 ESG와 친환경 등 지속가능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현재, 오히려 ESG 관련 규제는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연합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던 ESG 규제를 마무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세부 지침의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도 결과와 상관 없이 인권과 환경 규제는 지속되거나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 한층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유럽과 미국과 같은 주요 시장에서의 규범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준을 우리 산업에 내재화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는 ESG가 단순히 글로벌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명성,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은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필수적인 방향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 진영을 망라해 초당적으로 오늘 발족하게 된 국회ESG 포럼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ESG 관련 이슈를 정책적으로 깊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과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합쳐 주셨기 때문에 기후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SG는 이제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이며, 기업들이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기업 지속가능성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께 본 포럼에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도 국회의원 여러분과 함께 ESG의 가치를 확산하고,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유 연 철**

축 사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ESG포럼의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글로벌 경제 질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는 현 시점에서, 국회가 ESG를 중심으로 논의의 장을
연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제22대 국회가 포럼을 통해
ESG 관련 논의를 보다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게 이끌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우 원 식
국회의장

ESG는 더 이상 일부 기업과 기관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ESG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국회가 정당을 초월해 ESG라는 공통된 의제
아래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포럼
발족을 위해 애써주신 공동대표 민병덕 의원님과 정희용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속가능성의 확보는 단순한 ‘선행’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존속과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ESG는 우리 기업의 경영 방향을 설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 수단입니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흐름 속에서
단단히 자리 잡기 위해, ESG 경영과 금융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현재 ESG 법과 제도가 부족하거나 분절되어 여러 부문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은 규모에 따라 ESG 도입을 이제 막 시작한 곳도 있고, 이미 고도화 단계에 오른 곳도 있습니다. 금융 부문에서도 이미 ESG 요소가 투자 결정과 자본 흐름의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았으나, 지속가능성 공시의 부재로 리스크가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성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국회가 다루어야 할 의제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ESG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국내 ESG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가 앞으로 운영사무국을 맡아 그 논의를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주시길 기대합니다.

국회ESG포럼이 오늘의 발족을 계기로 ESG 정책 논의와 실천을 강화하는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국회ESG포럼의 발족을 축하드리며,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4년 10월 2일

국회의장 우 원 식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 ESG 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회 ESG 포럼>의 공동대표로서 오늘 행사를 주최하시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행사를 주관하시는 포럼 운영사무국의 모든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 동 훈
국민의힘 대표

전 세계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식의 대전환에 매진하는 가운데,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주요국 정부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ESG 실천을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유명 글로벌 기업들은 ESG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과 적용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다수의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ESG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ESG 관련 법·제도상의 미비점과 빈약한 정책 지원으로 국내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회 ESG 포럼'의 발족은 작금의 세계적 추세와 국내적 상황에 비춰볼 때 매우 적확하고 시의적절한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유럽 등에선 이미 탄소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거나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수출이 매우 중요한 우리나라 입장에선 이러한 글로벌 시장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무에서 유를 일궈온 우리 기업인 특유의 DNA는 기후변화라는 유례없는 상황을 충분히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발족식과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포럼의 공동 대표이신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과 모든 회원님 여러분, 준비과정에서 수고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께 행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일

국민의힘 대표 **한 동 훈**

축 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국회ESG포럼> 발족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회ESG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님, 국회ESG포럼 운영사무국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 재 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대급 폭염과 폭우, 늦더위와 늦장마까지 이상 기후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이 가장 시원한 해라며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되었으며, 인류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이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요시하는 ESG 가치 실천은 경영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천 핵심과제로 두고, 관련 법과 제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ESG경영이 유럽 국가에 비해 뒤쳐져 있습니다. ESG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하고, 정책적 논의도 부족해 국가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지향적인 내일을 위해 변화해야 합니다.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ESG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회ESG포럼’의 시작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야 구분 없이 ESG 생태계 촉진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미래를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기업, 국회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갑시다. 다시 한 번 ‘국회ESG포럼’ 발족을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께서 공동대표로 이끌어주신 <국회ESG포럼>의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포럼 사무국 역할을 맡아주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추 경 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 세계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과 영국, EU 등 세계 각국은 ESG를 촉진시키기 위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화, 공급망 실사 강화 등 각종 법제와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전 세계 기업들도 ESG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제 탄소 국경조정제도를 비롯한 ESG 무역 장벽화까지 현실시 되면서 국내 ESG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기반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곧 ESG 정보공개 기준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아직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초당적인 관심과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ESG 경쟁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과 금융기관이 국제무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ESG포럼>이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길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내 ESG 생태계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적극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내외귀빈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 경 호

축 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입니다.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ESG포럼」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럼 공동대표이신
정희용 의원님, 민병덕 의원님을 비롯하여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 덕 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적 효율을
기반으로 국제 분업이 가능했던 자유무역 체제가 약화되고, 지정학적 갈등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과 에너지 분야의 탄소 감축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는 무역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과 초고령화 사회 진입은 우리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위협하며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리 기업에도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ESG 경영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등장하였고, 기업이 갖추어야 할 필수 경영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그리고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는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각계가 협력하여 ESG 경영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산업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중견·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제 ESG 규범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ESG가 우리 산업에 내재화되어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국회 ESG포럼 발족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국회 ESG포럼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 덕 근**

축 사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김완섭입니다.

국회ESG포럼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해 주신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 그리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완 섭
환경부 장관

평균 기온 25.6도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올여름, 지난해에는 호남 지역에 7개월이 넘는 가뭄이 이어지는 등 우리는 기후 위기가 이미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글로벌 기후공시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이 세계 경제질서로 자리 잡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도 빠르게 ESG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기업의 환경, 사회, 투명경영 지원 핵심 부처로서 특히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기후 공시 등 환경 부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인력, 자금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국내외 제도의 이중적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기후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환경정보 공개 제도 등 관련 제도를 과감히 손볼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민의 여론을 가장 활발히 반영할 수 있는 국회에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럼을 발족한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

부터 시작되는 국회ESG포럼이 건설적인 토론으로 ESG 해법과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핵심 논의체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회ESG포럼의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0월 2일

환경부 장관 김 완 섭

축 사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병환입니다.

국회ESG포럼의 발족을 축하드립니다.

공동대표로서 포럼의 발족을 위해 힘써주신

정희용 의원님과 민병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님, 유연철 유엔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여러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 병 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지난 9월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예년에는 선선한 가운데 맞이했던 추석도 측정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9월이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각국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건강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지 못하고 사회적 가치를 경시하는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음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시장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국회ESG포럼을

발족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과 우리 산업 경제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융위원회도 ESG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 병 환

III

발족식

- 국회ESG포럼 구성의원
-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 제22대 국회ESG포럼 정책 아젠다

국회ESG포럼 구성 의원

연번	의원명	정당	비고
1	민 병 덕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2	정 희 용	국민의힘	대표의원
3	김 기 현	국민의힘	
4	윤 상 현	국민의힘	
5	박 덕 흠	국민의힘	
6	강 대 식	국민의힘	
7	권 영 진	국민의힘	
8	김 형 동	국민의힘	
9	박 정 하	국민의힘	
10	백 종 현	국민의힘	
11	유 상 범	국민의힘	
12	이 인 선	국민의힘	
13	김 대 식	국민의힘	
14	서 천 호	국민의힘	
15	조 승 환	국민의힘	
16	조 지 연	국민의힘	
17	최 은 석	국민의힘	
18	김 소 희	국민의힘	
19	박 준 태	국민의힘	
20	유 용 원	국민의힘	
21	최 보 윤	국민의힘	
22	최 수 진	국민의힘	

연번	의원명	정당	비고
23	한 지 아	국민의힘	
24	김 태 년	더불어민주당	
25	정 성 호	더불어민주당	
26	한 정 애	더불어민주당	
27	박 주 민	더불어민주당	
28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29	박 상 혁	더불어민주당	
30	이 소 영	더불어민주당	
31	김 현 정	더불어민주당	
32	박 민 규	더불어민주당	
33	박 선 원	더불어민주당	
34	박 정 현	더불어민주당	
35	박 지 혜	더불어민주당	
36	손 명 수	더불어민주당	
37	송 재 봉	더불어민주당	
38	이 광 희	더불어민주당	
39	전 진 숙	더불어민주당	
40	김 윤	더불어민주당	
41	박 홍 배	더불어민주당	
42	임 미 애	더불어민주당	
43	서 왕 진	조국혁신당	
44	신 장 식	조국혁신당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국회ESG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

Session 1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소개

-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소개 목차

- 01 | 발족 배경
- 02 | 목적 및 역할과 조직 구성
- 03 |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
- 연구과제
- 04 | 추진 계획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소개

목차

01 발족 배경

02 목적 및 역할과 조직 구성

03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 - 연구과제

04 추진 계획

2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소개

국회ESG포럼 가입 의원 명단

연번	의원명	정당	비고
1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2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의원
3	김기현	국민의힘	
4	윤상현	국민의힘	
5	박덕흠	국민의힘	
6	강대식	국민의힘	
7	권영진	국민의힘	
8	김형동	국민의힘	
9	박정하	국민의힘	
10	백종현	국민의힘	
11	유상범	국민의힘	
12	이인선	국민의힘	
13	김대식	국민의힘	
14	서천호	국민의힘	
15	조승환	국민의힘	

연번	의원명	정당	비고
16	조지연	국민의힘	
17	최은석	국민의힘	
18	김소희	국민의힘	
19	박준태	국민의힘	
20	유용원	국민의힘	
21	최보윤	국민의힘	
22	최수진	국민의힘	
23	한지아	국민의힘	
2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25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26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27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28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29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30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연번	의원명	정당	비고
31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32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33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34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35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36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37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38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39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40	김윤	더불어민주당	
41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42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43	서왕진	조국혁신당	
44	신장식	조국혁신당	

3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소개

발족 배경 ① 패러다임 전환

“

기후변화·생태위기·불평등·양극화 등
지속가능성 위기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 진행

”

패러다임 전환 양상

- ✓ 배제적 성장 → 포용적 성장 (2015년 UN SDGs)
- ✓ 고탄소 사회 → 탈탄소 사회 (2015년 파리기후협정)
- ✓ 주주자본주의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2019년 미국 주요 기업들의 BRT* 선언)

*BRT(Business Round Table): 미국 200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 단체

4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소개

발족 배경 ② 지속가능발전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증대

”

5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소개

발족 배경 ③ ESG 관련 법·제도

“
유럽연합(EU),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ESG 관련 법·제도 구축 및 의무화
”

ESG 관련 법·제도 의무화

✓ ESG 정보공개 의무화

- IFRS(국제회계기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S1(지속가능성 재무정보공시 일반 요구사항), S2(기후 관련 공시)
- 유럽연합(EU)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2025년부터 공시 의무
-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규칙: 2026년부터 공시 의무화

✓ 지속가능금융공시 의무화: EU는 2021년부터 의무화

✓ 분류체계(Taxonomy): EU 등 각 국가

✓ ESG 평가기관 규제: EU는 2024년 법 구축

✓ EU 공급망 실사지침 의무화: 2027년부터 적용

6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소개

발족 배경 ④ 무역 장벽화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후 및 ESG 관련 사항들의
무역 장벽화
”

환경, 인권, 노동 등과 무역을 연계하여 수출입 통제

✓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EU 내로 수입되는 역외 생산 제품에 대해 EU 내에서 생산될 때 지불하는 탄소 비용과 동등하도록 추가적인 탄소 가격을 부과 및 징수하는 제도



7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소개

발족 배경 ⑤ 공급망 ESG 요구**넷제로 · RE100**

- ✓ RE100(Renewable Energy 100)
 - 기업이 제품의 생산, 유통, 보관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

**공급망 실사**

- ✓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 기업의 공급망 내에서 인권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실사 의무를 부과
- ✓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급망 투명성법 등



“
공급망에서의 ESG 요구 강화
”

8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소개

발족 배경

- ① 기후변화·생태위기·불평등·양극화 등 지속가능성 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 진행
- ②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증대
- ③ 유럽연합(EU),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ESG 관련 법·제도 구축 및 의무화
- ④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후 및 ESG 관련 사항들의 무역 장벽화
- ⑤ 공급망에서의 ESG 요구 강화



- ✓ 국내 ESG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 및 부족한 정책 지원으로 기업과 금융 분야의 국제경쟁력 저하 우려
- ✓ ESG 경쟁력 강화와 ESG 생태계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

9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소개

목적 및 역할

“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 및 대안 마련”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

- ESG 시장 생태계
- ESG 사회 생태계

ESG 촉진 입법 및 정책 과제 발굴

- ESG 경영
- ESG 금융(책임투자 등)

이해관계자 ESG 인식 제고 및 행동계획 마련

국제적인 ESG 협력 네트워크 구축

- ESG 관련 국제적 이니셔티브와의
협력 강화

10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소개

조직 구성

원칙

- ☑ **탈진영**: 지속가능성에 동의하는 여야 국회의원으로 진영을 망라한 구성
- ☑ **전문성**: 사무국*은 ESG 전문기관의 운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 확보
* 사무국: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 **포괄성**: 기업·금융기관·시민사회·언론 등 의견 수렴 및 검토



목표

최대 규모의
초당적 국회 정책연구 포럼
발족 및 운영

11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소개

조직 구성



12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소개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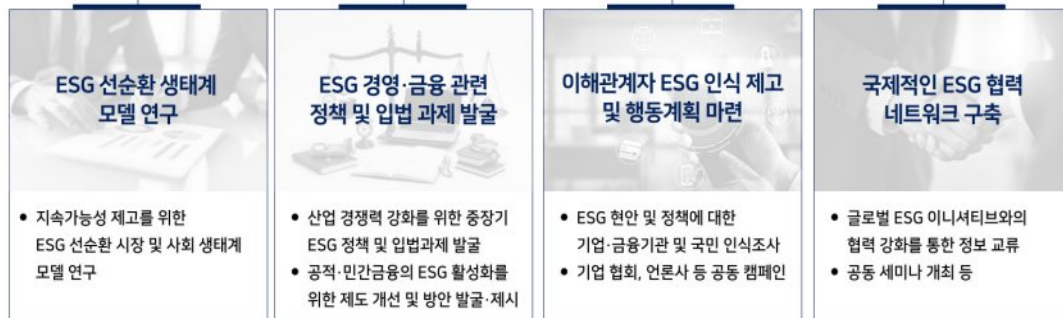


13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소개

주요 사업

국회ESG포럼



14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소개

연구 과제

목적

ESG 생태계 구축 및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ESG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법, 제도, 정책을 다각도로 논의

ESG 경영 분과

- ✓ ESG 정보공개 제도화를 위한 입법 추진
- ✓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 ✓ ESG 산업 규제 및 정책 지원 방안 마련
- ✓ ESG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



ESG 금융 분과

- ✓ ESG 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 공적 금융기관·민간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방안
- ✓ ESG 금융 생태계 조성 기반 구축



15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소개

세부 연구 과제(안)

과제	세부내용	비고
ESG 기본법	- ESG 선순환 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 제정	ESG일반
ESG 공시	- ESG 공시 의무화 방안 (공시기준, 공시 의무화 시점, 적용대상, 보고위치 등)	ESG경영·금융
공급망 실사	- 글로벌 공급망 재편 현황 및 리스크 대응 방안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방안) - 공급망 ESG 실사법 도입 검토	ESG경영
지속가능금융	-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 금융기관 자산포트폴리오 넷제로 달성 방안 - 지속가능금융 공시 도입 관련 연구 - 공적연기금 운용의 ESG 수준 제고 방안 -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확보 - ESG 금융공사 설립 관련 실효성	ESG금융
ESG 워싱 방지	- ESG 워싱 방지를 위한 법·제도 및 기구 구축 - 녹색분류체계 적용 및 관련 공시 - 소셜 택소노미 구축	ESG경영·금융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 국가 전력망 탈탄소화 목표 수립 및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	ESG경영

16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소개

추진 계획

활동 계획(안)

- ☑ 국회ESG포럼 전체 세미나(연 2회 기본 개최, 상·하반기)
- ☑ 분과위원회
 - ESG 경영 분과(연 2회 기본 개최, 상·하반기)
 - ESG 금융 분과(연 2회 기본 개최, 상·하반기)
- ☑ 현안이 있을 경우 국회ESG포럼 개최
- ☑ 타 기관의 공동 개최 요청이 있을 경우, 판단하여 국회ESG포럼 개최

구분	주요 내용
국회ESG포럼	- 발족식 - ESG 기본법 제정 - ESG 공시 의무화 논의
ESG 경영분과	- ESG 공급망 실사 - ESG 인프라 구축 및 워싱 기준 논의
ESG 금융분과	- 기후리스크와 자산건전성 평가 - 국민연금 기후리스크 주주활동 내실화

17

국회ESG포럼 발족목적 및 운영계획 소개

감사합니다

제22대 국회ESG포럼 정책 아젠다

(국회ESG포럼 발족식)

제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ESG 정책 어젠다



2024년 10월 2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



ESG = 생존과 경쟁력

ESG가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

기업 경영과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ESG 요구



ESG 규제 강화

- 기업의 ESG 정보공시 의무 강화
- 2050년 탄소배출 넷제로 (Net-Zero) 달성을 위한 탄소감축 규제 강화 및 기업의 준수 노력

1



투자자의 ESG 요구 증대

-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도모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의 책임투자 및 ESG 투자 전략 활용 확대

2



기업평가에 ESG 반영

- 글로벌 신용평가사, ESG 요소를 신용평가에 적극 반영

3

고객의 ESG 요구 증대

- 공급망 관리와 협력업체 선정의 주요 요소로 부각되는 ESG
- MZ세대 중심의 고객 ESG 요구 증대

4

생존과 경쟁력
(기업/금융기관/국가)



ESG

Source : 삼성KPMG 경제연구원(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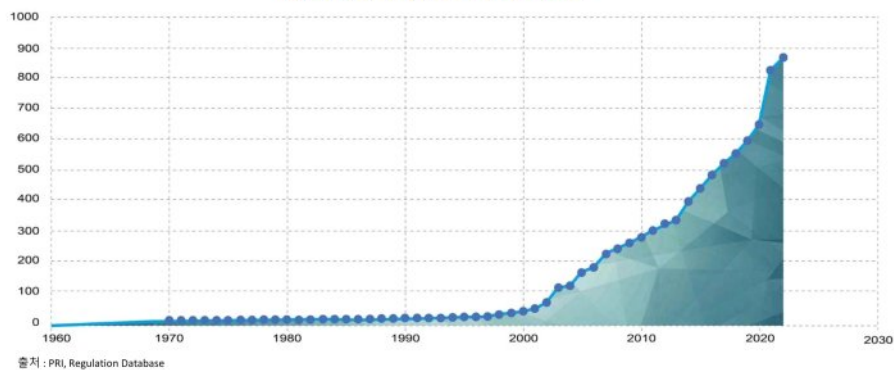


ESG 시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 : 글로벌 ESG 규제 정책 추이

■ ESG의 시대

- 1960년부터 2022년까지 ESG 관련 규제들의 채택이 가속화
- 투자자들이 ESG 요소를 포함한 모든 장기적인 가치 동인을 고려하도록 지원, 권장 또는 요구하는 868개의 정책 도구 및 지침과 300개 이상의 정책 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96%는 2000년 이후에 개발됨

[표] ESG(지속가능금융) 관련 누적 정책 개입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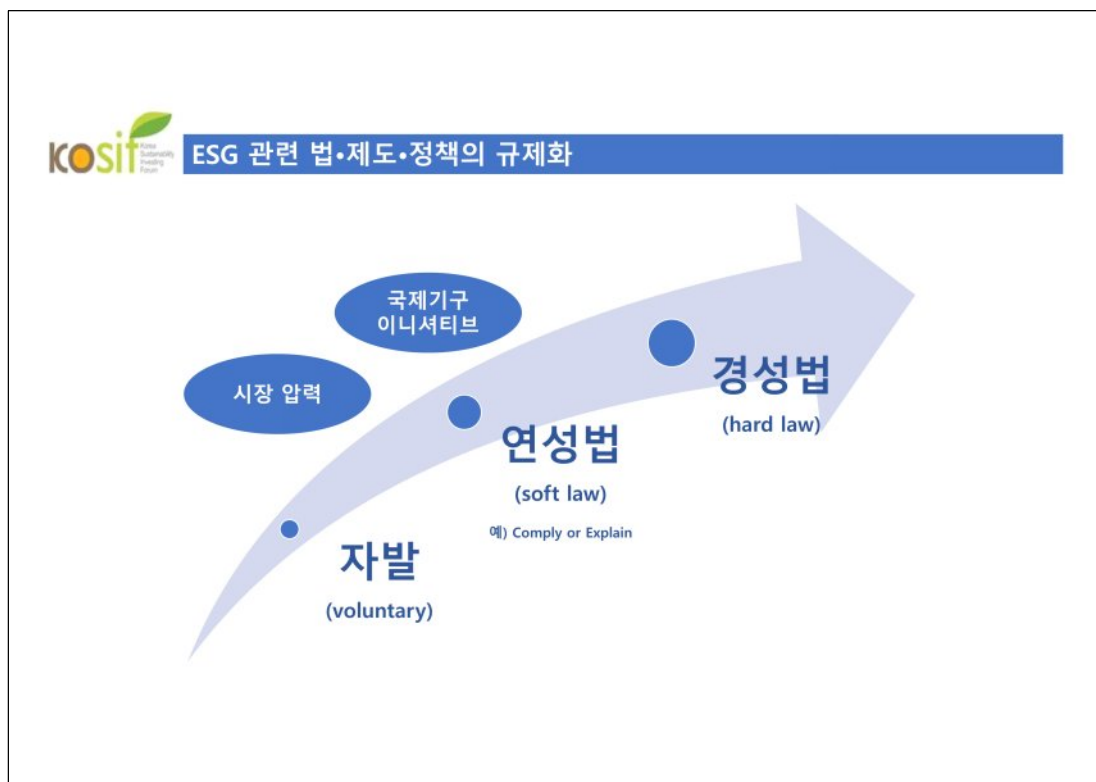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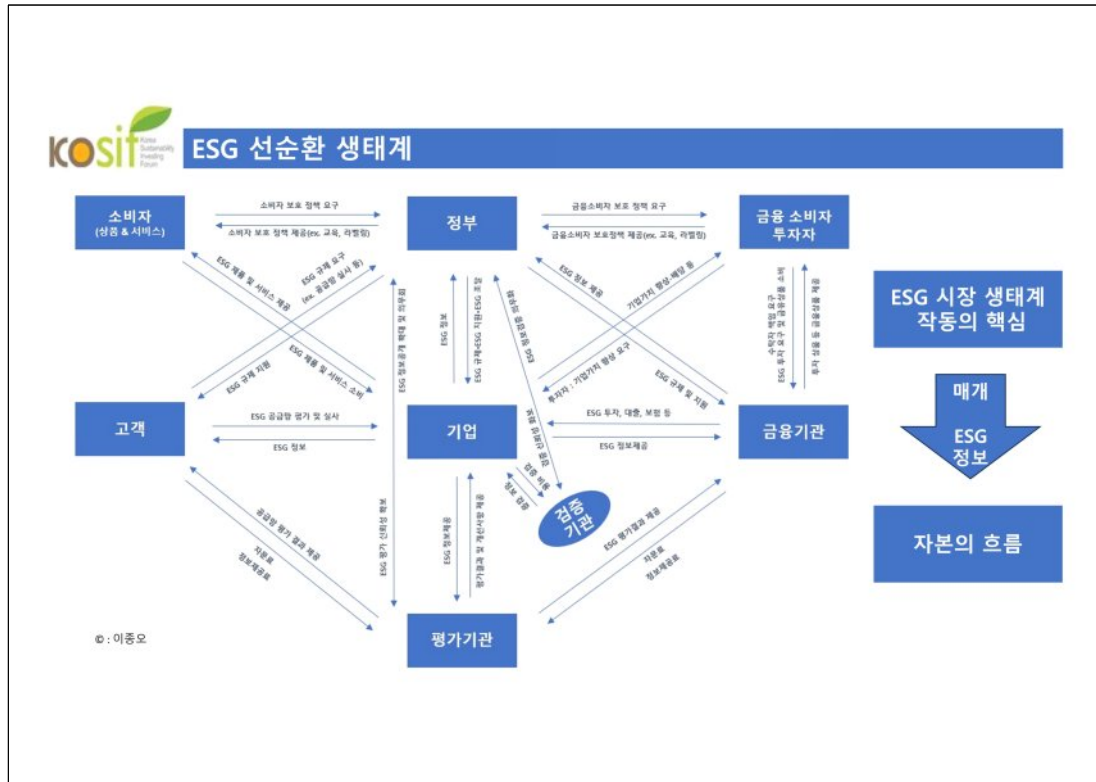


ESG 시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 : 글로벌 ESG 규제 유형

[표] PRI 규제 데이터베이스 상 규제유형과 적용대상

규제유형	설명	적용대상
기업 ESG 정보공개	주요 ESG 사안에 대한 기업의 전략, 운영, 성과와 관련한 현재와 미래 데이터와 분석을 반복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발행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정책 수단	• 비기업 연기금 • 기업 연기금 • 보험사 • 기타 자산 소유자 • 투자 운용사 •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 기업 • 신용평가기관 • 기타(거래소 등)
투자자 ESG 정보공개	투자자가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공개 할 때 ESG 이슈를 포함하도록 권장/요구하는 정책 수단	
투자자 ESG 통합	투자자가 그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ESG 이슈를 포함하도록 권장/요구하는 정책 수단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 관여와 의결권 행사의 모범 관행 원칙. 일부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투자 의사결정시 ESG 이슈를 고려하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분류체계	투자자가 경제활동이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지를 이해시키고, 저탄소·포용경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데 도움을 주는 분류 시스템	
부문별 특정 정책	배출권거래, 오염세, 목재 거래법과 같이 부문별로 초점을 둔 실물경제 정책 수단	
금융상품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라벨이나 채권 등을 도입하는 정책 수단	
국가 지속가능금융 전략	금융 부문 전체가 경제와 금융을 파리협정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맞추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목표를 지원하도록 보장하는 광범위한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 및 실행계획/전략	
기타 규제	책임투자과 관련한 기타 규제(예 : 넷제로 서약, 국제인권 가이드라인)	

출처 : PRI 규제 방법론 문서를 토대로 이종오 작성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 어젠다 ① : ESG 기본법 제정

ESG 기본법

기본법에 담아야 할 ESG 이슈

ESG 공시
(기업공시/투자자 공시)
ESG 평가
ESG 검증
ESG 투자(금융)
분류체계
공급망 관리
ESG 공공조달
ESG 워싱 방지
·

기본법에 담아야 할 주체
(책임과 역할)

정부
(중앙정부/지방정부)
공공기관
기업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금융투자기관
(공적금융기관/민간금융회사)
ESG 평가기관
ESG 검증기관
ESG 지원기관
소비자
교육기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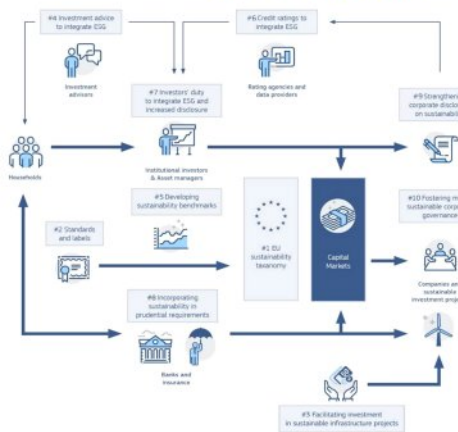
□ ESG 기본법 성격 □

- ESG 추진을 위한 인프라 성격, 체계적인 ESG 대응을 위한 성격의 법
- 규제 (X) → 지원법(O)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 어젠다 ② : K-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그림] EU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출처 : EU

□ 지속가능한 경제로 자본흐름 유도

- ①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EU 분류체계 수
- ② 녹색금융을 위한 상품과 리벨 개발
- ③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투자 촉진
- ④ 투자 자본 제공시 지속가능성 통합
- ⑤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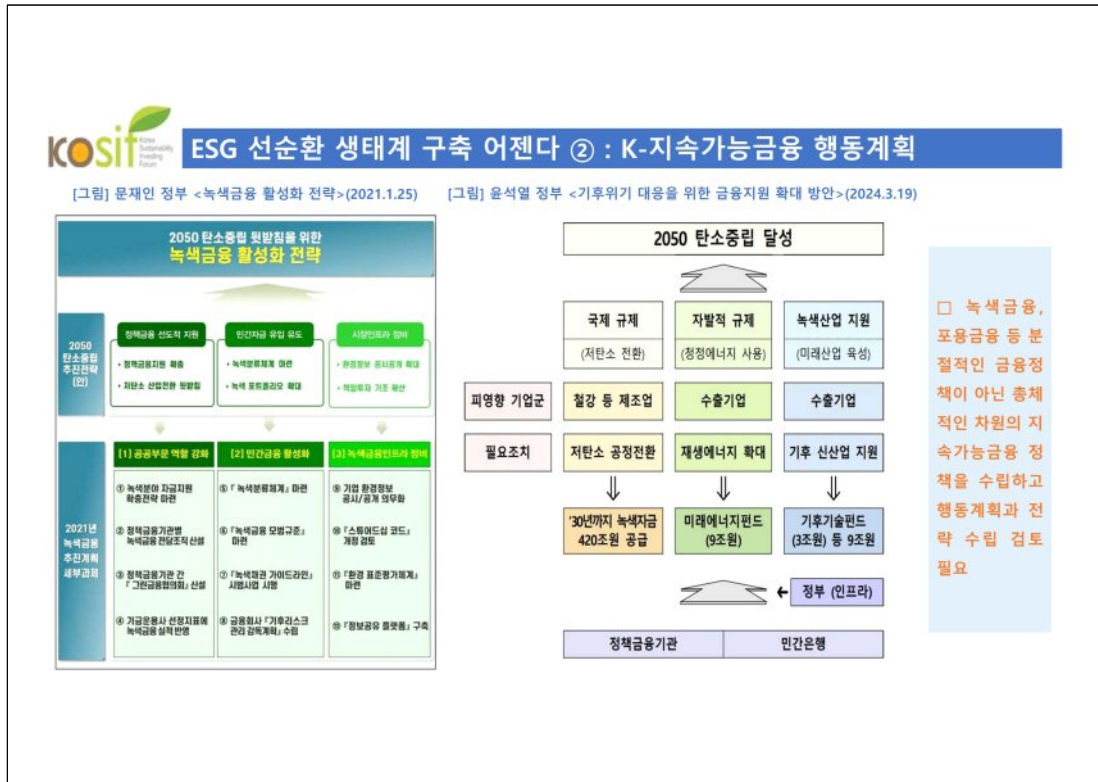
□ 리스크 관리에 지속가능성 주류화

- ⑥ 평가와 연구에서 지속가능성 더욱 통합
- ⑦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의무를 명확히 함
- ⑧ 건전성 요구사항에 지속가능성 통합
- ⑨ 지속가능성 공개 및 회계기준 강화

□ 투명성과 장기주의 육성

- ⑩ 지속가능한 기업 지배구조 육성 및 자본시장의 단기주의 개선

• EU는 그린딜 추진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4대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전략을 담은 <지속가능금융 전략>을 2021년 7월 발표함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 어젠다 ② : ESG 정보공개 의무화

[그림] 주요 관할권별 공시제도(안) 및 기준개발 동향

관할권	관할당국	공시제도	기준제정기구	기준제정결과	다음 단계	적용대상	보고연도	인증 요구
	EC	CSRD	EFRAG	ESRS 채택 '23.7월	SME 기준 '24년 산업별 기준 '26년 비EU 기준 '26년	EU 대기업, 상장 SME, 비EU 기업	'25년 FY24	제한적 인증 3년 이내 합의적 인증 고려
	FSA		SSBJ	ED 의견수렴 중 '24.3월~7월	최종 기준 발표 '25.3월 예정	도쿄증권거래소 프러덴셜 기업 주요 상장기업	'27년 FY26 or '28년 FY27	요구 '28년부터
	SEC	SEC 규칙	SEC	최종안 승인 '24.3.6월	미 연방정보 게재 후 60일 후 발표 예정	모든 공개기업	'28년 FYB25	제한적 인증 일부 기업은 4년 후 합의적 인증
	CSA		CSSB	ED 의견수렴 중 '24.3월~6월	최종 기준 발표 '24.4분기 예정	증권 발행자	재발 '26년 FY25	
	재무부		AASB	ED 의견수렴 완료	최종 기준 발표 '24.6월 예정	기업법 제2M장 원칙보고서 제출 기업	'28년 FYB25	제한적 인증 '30년까지 합의적 인증 고려
	DBT		DBT	IFRS S1 및 S2 승인 의견수렴 완료	UK SDS 발표 '25.1분기 예정	(상장기업-FCAP가 포함) (통제법인-회계부가 포함)	'27년 FY26	
	재정부		재정부	일반 기준 ED 의견수렴 중 '24.5월~6월	일반/기후기준 '27년 기후 위 기준 '30년 산업별기준 '30년	관련 규정에 따른 중국 국경 내 모든 기업	미정	
	회계/기업관리청		SGX	ED 의견수렴 완료	최종 기준 발표 일정 미정	상장기업, 대형 비상장사	'28년 FY25	제한적 인증

* 보고연도: 대다수가 당해연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최초의 보고가 이루어지는 보고연도를 안내함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 국내 ESG 공시 이슈 □

- 공시 기준(예: scope 3 포함 여부)
- 공시 위치(사업보고서 공시 여부) *법정공시
- 공시 적용 시점(2026년 - 2029년 사이)

• 금융위 방향: 국제적 정합성 + 국내 산업구조와 여건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 부담 최소화. 국내 공시시점은 **2026년 이후**

• 기업 협회: **2029년부터** 공시 단계적 적용

• 시민사회: **2026년부터** 공시 단계적 적용

• 글로벌 ESG 투자자: ISSB의 공시기준 부합 요구, 빠른 공시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 어젠다 ③ : ESG 정보공개 의무화

[표] 제22대 국회 ESG 정보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현황

법안	대표발의	발의일	내용
자본시장법 개정안	한민수 의원 등 14인	2024.6.20	- 사업보고서에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 정보 공시 의무 - 업무보고서에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정보 공시 의무
자본시장법 개정안	박상혁 의원 등 13인	2024.8.27	-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시 의무(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에 한하여 적용) 2026년 이후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 의원 등 34인	2024.8.20	- 지속가능성보고서 제출 의무화 : 상장회사는 각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지속가능성 관련 위원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는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기준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 작성 - 상장회사는 지속가능성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음 -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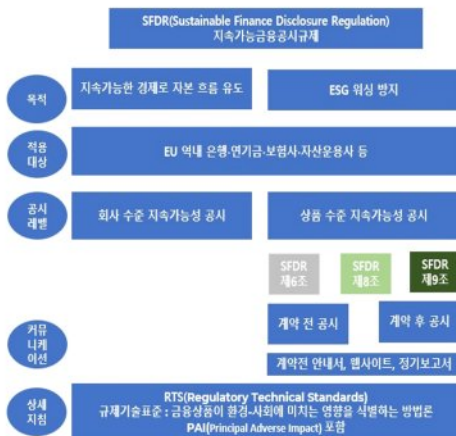
구분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	21대 국회
ESG 정보공개 발의 건수 (자본시장법 개정안)	1건	2건	3건	2건

출처 : 국회의안정보서비스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 어젠다 ③ : K-지속가능금융공시

[그림] 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 개요



[그림] 주요 부정적 영향(PA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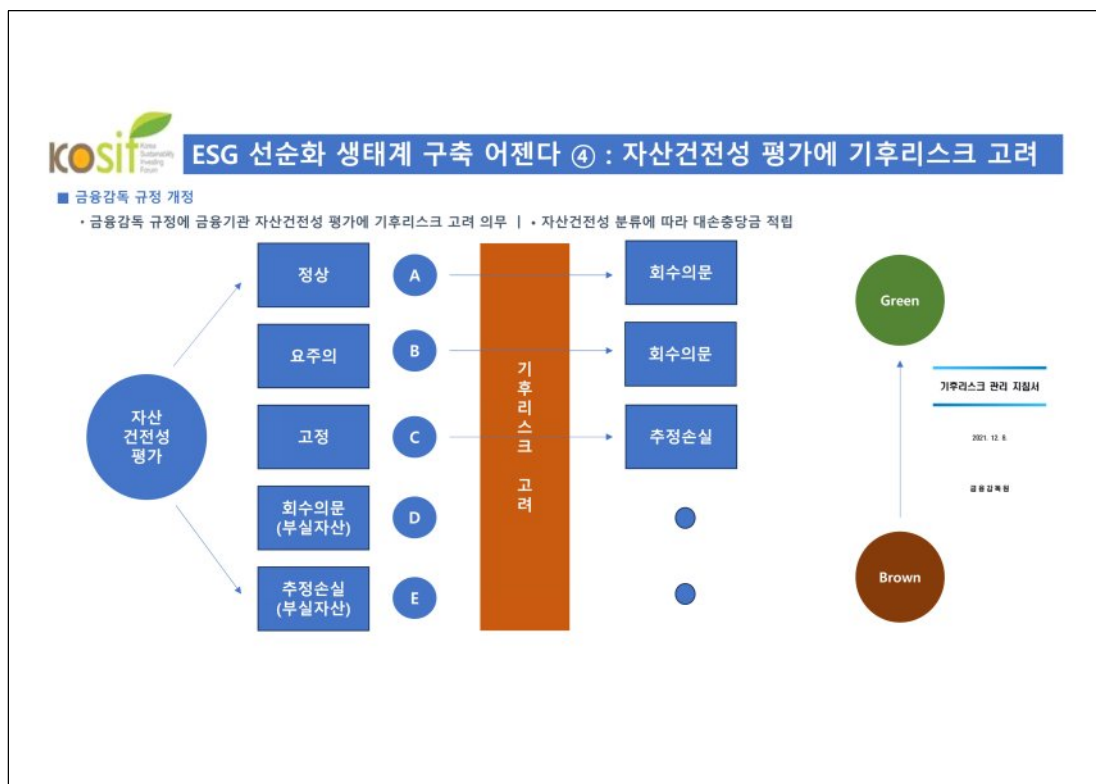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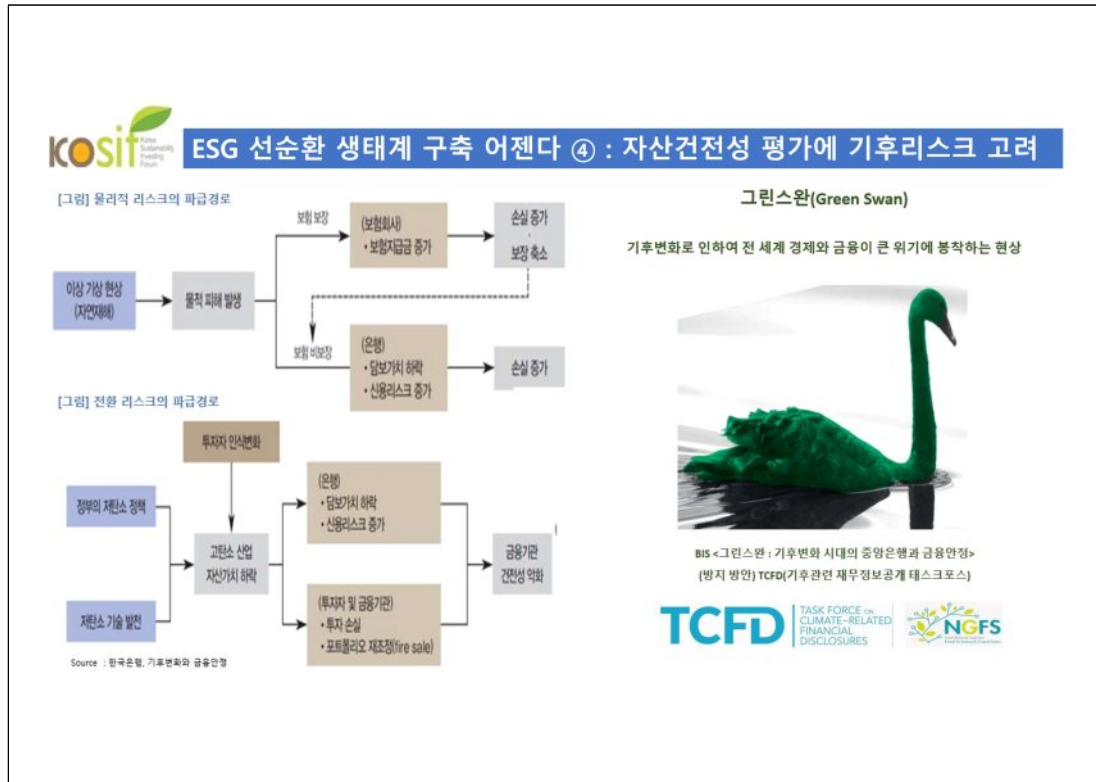
투자대상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지표	제출자료
기업	온실가스 배출	기후 및 다른 환경지표들
		1. 온실가스 배출(Scope 1,2,3 총 온실가스 배출도)
		2. 탄소발자국
		3. 피투자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4. 화석연료 관련 기업 노출도
		5. 비재정량화되지 소비 및 생산 비용
	생물다양성	6. 기후 중요 부존당 에너지 소비 집약도
		7. 생태보유구역 내 부정적 영향 활동
		수자원
		8. 해수 생물
사회와 근로자 문제	채고금	9. 유해채고금 비율
		사회와 근로자, 인권존중, 부패방지 및 뇌물수수 방지에 관한 사항
	사회와 근로자 문제	10. UNODC 공약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지침 위반
		11. UNODC 공약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지침 표시
		12. 난징 협약 준수 여부
		13. 이사회 성별 다양성
		14. 논란 제기가 있는 부위에 대한 노출도(대인미화, 일속, 탄, 화학유기 등)
		환경
		15. 피투자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도
		사회
부동산 자산	확적영향	16. 사회적 위험 관련 국가
		17. 부동산 자산을 통한 화학연료(주유, 저장, 운송 및 제조 관련) 노출도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18. 에너지 효율적인 부동산 자산 노출도
		19. 에너지 효율적인 부동산 자산 노출도

○ SFDR

금융기관에 투자자산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해당 투자자가 사회와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EU가 수립한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의 일환으로 2019년 11월 발표해 2021년 3월 발효

○ 유럽금융감독기구(ESA) : SFDR을 보완하는 RTS 최종안을 2023년 12월 발표(지속가능투자에 대한 추가적 공시, PAI의 새로운 지표 도입, 기존 지표에 대한 구체화,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에 대한 새로운 공시 및 공시 템플릿 수정안 포함)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 어젠다 ⑤ : 자산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고려

■ NGFS(녹색금융 네트워크) : Network of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for Greening Financial System

- 녹색금융 촉진을 위해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의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을 주축으로 2017년 12월 발족된 국제기구
- NGFS는 기후 및 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발적 논의체
-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134개 멤버, 21개 옵저버
-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가입 선언(2021.5.17) / 한국은행은 2019년 11월에 가입

[표] NGFS의 6대 권고안

권고안	내용
1	•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금융안정성 모니터링 및 세부 금융감독에 반영 - 금융시스템의 기후 관련 재무적 리스크 평가 - 기후관련 리스크를 건전성 감독에 반영 (금융회사에서 기후 관련 위험이 이사회 단위에서 이해되고 논의되며, 리스크 관리 및 투자결정에서 고려되고 회사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여) (금융회사가 기후 관련 재무위험에 대한 식별, 분석, 관리 및 공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여) (향후 금융회사에서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감독지침 수립)
2	• 지속가능성 요소를 포트폴리오 관리에 반영
3	• 정보격차 줄이기
4	• 인식과 지적역량 구축 및 기술지원과 지식공유 장려
5	• 체계적이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후-환경 관련 정보공시 체계 구축
6	• (녹색) 경제활동 분류체계 지원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 어젠다⑥ : 공적금융 자산포트폴리오 넷제로 정책

국민연금의 예

국민연금 금융배출량 (국내주식 일부)

2,710만 톤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

(2021년 6억7960만톤)

정보공개한 812개 기업만 계산

- 국내주식
- 국내채권
- 해외채권
- 해외주식
- 대체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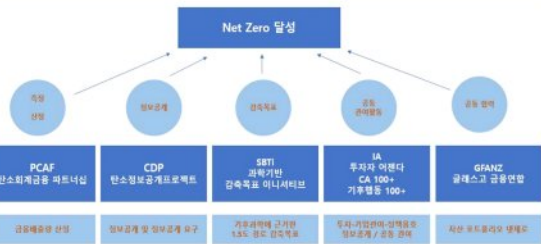
?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 기업 금융배출량 상위 10곳 (2021년 기준)

(단위: 톤(이산화탄소 환산 기준) 자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금융배출량: 탄소 배출 기업에 투자, 대출 등을 하줄 때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한국전력공사(에너지)	1034만7228
포스코홀딩스(소재)	727만5754
삼성전자(반도체)	123만3568
에쓰오일(에너지)	76만4876
엘지화학(소재)	60만4485
대한항공(운송)	55만9108
롯데케미칼(소재)	54만5322
쌍용씨엔이(소재)	44만9022
에스케이하이닉스(반도체)	41만1013
고려아연(소재)	34만7867



[그림] GFANZ의 금융부문별 연합 현황

구분	설립 시기	참여기관 수	운용자산	주도기관
NZAOA(넷제로 자산소유자 연합)	2019.9.	80개	9.5조 달러	UNEP FI, PRI
NZAM(넷제로 자산운용사 연합)	2020.12.	315개	64조 달러	IA
PAAO(파라 목표 동조 자산소유자 그룹)	2019.3.	56개	3.3조 달러	IIGCC
NZBA(넷제로 은행 연합)	2021.4.	138개(77개)*	74조 달러	PRB
NZIA(넷제로 보험 연합)	2021.7.	만약 ESG로 해체: 2024년 넷제로 보험 전환 포럼(FIT)로 새 출발		
NZFSFA(넷제로 금융서비스 제공자 연합)	2021.9.	26개	N/A	PRI
NZICI(넷제로 투자컨설턴트 이니셔티브)	2021.9.	12개	N/A	PRI, 미·영 컨설팅 회사
VCA(벤처 기후 연합)	2023.4.	80개	N/A	유엔 기후변화 고위급 챔피언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 어젠다⑦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 주주권 확대

[그림]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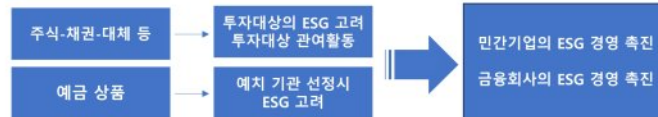


[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 규모 추이

단위 : 조 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금운용규모	633.2	724.8	773.7	756.3	893.1	1,023.3
사업비	129.3	148.9	169.8	181.1	180.6	199.2
기금운영비	2.5	2.6	2.6	2.7	2.7	2.7
여유자금운용	230.2	238.4	229.5	225.4	280.0	313.5
정부내부지출 등	271.2	334.9	371.8	347.1	424.9	507.9

출처 : e-나라지표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 어젠다 ⑧ : ESG 공급망 실사법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 환경
보호 강화목적으로 공급망에
대한 실사 추진

- EU : 지속가능한 기업실사지침
- 프랑스 : 기업 실사 의무법
- 독일 : 기업 공급망 실사법
- 영국 : 현대판 노예방지법
- 네덜란드 : 아동노동 실사의무
- 미국 :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

중소기업 ESG 대응을 위
한 실효성 지원책 마련
대중소 ESG 파트너십

[그림] 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적용 대상

적용연도(발효 후)	기업 규모
3년	직원 수 5000명 이상, 매출액 15억 유로(약 2조원) 이상 기업
4년	직원수 3000명 이상, 매출액 9억 유로(약 1조3084억원) 이상 기업
5년	직원수 1000명, 매출액 4억5000만 유로(약 6542억원) 이상 기업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 어젠다 ⑨ : ESG 공공조달

■ 지속가능 공공조달 당위성과 영향력

- 지속가능 공공조달(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재화와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반부패, 환경, 고용, 노동, 사회통합 등 구매활동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방식임
-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ESG 등을 고려함으로써 **투자자의 시장감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중소기업의 ESG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EU나 해외의 공공조달시장에의 신규 진입 및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표] 제21대 국회 조달사업법 개정안 발의(이용선 의원안)

구분	주요내용	비고
안 제1조	○ 조달사업의 목적 - 공공의 이익, 지속가능한 조달 추가	· 현행 조달사업의 목적에는 공공성, 효율성 규정
안 제5조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조달기업의 환경적·사회적 가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추가	· 현재는 공공조달 관련 정책 및 제도마련, 공공조달 관련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안 제6조	○ 사회적 책임 장려 조달 - 조달절차에서 환경적·사회적 가치 반영 의무화	· 현재는 사회적·환경적 가치 반영 임의규정
안 제10조	○ 자료제공의 요청 등 - 조달청장은 조달기업에게 환경적·사회적 가치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현재 자료제공의 요청대상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한정
안 제26조	○ 우수조달물품 지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 대상에 환경적·사회적 가치 우수 기업 추가	· 현재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대상은 중소기업, 초기 중견기업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 어젠다 ⑩ : ESG 위상 방지책 강화



III

토 론

-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기본법’
- 좌 장 |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 패 널1 |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 패 널2 |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 패 널3 |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장
- 패 널4 |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장
- 패 널5 |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정보분석센터장
- 패 널6 |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기본법’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기본법」 제정 제안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수석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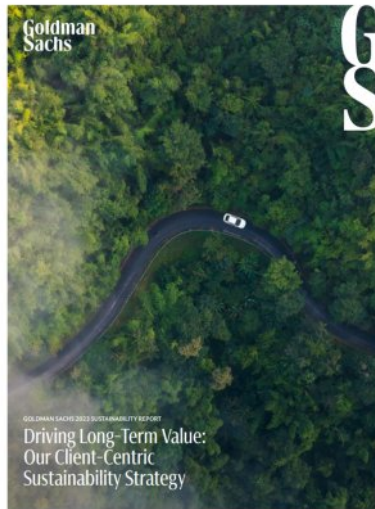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01 ESG 등장 배경

02 ESG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변화

03 ESG 기본법 제정 필요성

골드만삭스의 변화?



Letter From Our Chairman and CEO

We have long been committed to addressing critical environmental issues, beginning in 2005 with our inaugural Environmental Policy Framework where we were one of the first financial institutions to recognize the scale and urgency of the challenges posed by climate change. We have always acknowledged that navigating climate transition would be complex and that as a financial institution, our central focus should remain on how we can deliver sustainability solutions for our clients and grow commercial capabilities to support them.

The challenges facing climate transition are multifaceted. Our economy is heavily dependent upon a well-functioning energy system. Today more than 80% of our global energy needs come from fossil fuels. That coupled with the building of long energy demand and generation conflicts in nature and the added cost has increased the already affordable and reliable energy. In addition, higher levels of inflation have been headwinds to decarbonization as most costs have increased and supply chains are more complicated to navigate. And the impact of emerging technology remains to be seen, with some sources indicating that electricity consumption from data centers, generative AI, and cryptocurrencies could double by 2030 compared with 2022 levels.

Scarcity of sustainability commitments, divergence in client preferences, and regulatory approaches to climate change across jurisdictions have also evolved. Our clients include pension plans and retirement funds, hedge and small businesses, investors, and governments across various sectors and geographies and with a diversity of investment strategies and business models. Regulatory regimes are also evolving at different speeds with different scales and priorities. In 2023, we were one of the first US banks to file a global financial sustainability report under the European Union'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This new requirement is a significant step, covering not only our financial activities but also our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nd we are investing in our data management, measurement, and reporting capabilities to prepare for the shift in the regulatory landscape.

Despite all of these external forces and evolutions, central to our focus on the effects from climate change as well as decarbonization has always been our commercial capabilities and the insights that we can provide to our clients to help them meet responsibilities and manage risk. Like us, many of our clients are also focused on supporting our clients in this area. First, we will continue to finance and advise our clients in the energy sector, and we will also invest in innovative climate transition technologies that can accelerate the transition. We need to do this. It is not an if, it is an and. Second, we recognize that there is a gap between global climate ambition and the reality of where our energy system is today, and the gap will not be closed just by private sector voluntary commitments. Government has always and will continue to play a critical role in setting policy, providing incentives, issuing regulations, challenges, and lowering the long impact on our clients. Decarbonization goals and our ability to support them.

Lastly, the most meaningful role we can play in climate transition is developing the solutions our clients need to deliver on their decarbonization goals for their businesses. Over time, we have developed independent, aspirational goals and commitments to measure our progress, make our practices, and provide transparency to our clients.

1. This report is a summary of the Goldman Sachs 2023 Sustainability Report.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goldmansachs.com/sustainability.

GOLDMAN SACHS 2023 SUSTAINABILITY REPORT



3

골드만삭스의 변화?



4

ESG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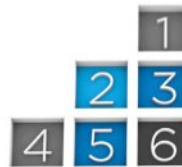
- ▶ 투자자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반영 해야 하는 비재무적요소를 의미하는 투자자의 용어로 시작
- ▶ 2004년 'Who Cares wins' 보고서 이후, 2006년 책임투자원칙 (PRI :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이 창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

1. 우리는 ESG 이슈를 투자 분석과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통합시킨다
2. 우리는 적극적인 소유자가 되며, ESG 이슈를 우리의 옰니십 정책과 관행에 통합시킨다
3. 우리는 투자대상의 ESG 이슈에 대한 적절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4. 우리는 투자산업의 PRI 수용과 이행을 촉진한다
5. 우리는 PRI 이행에 있어서 우리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한다
6. 우리는 PRI 이행에 대한 활동과 진행사항을 보고한다



THE SIX PRINCIPLES

- 1 We will incorporate ESG issues into investment analysi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 2 We will be active owners and engage with companies on ESG issues.
- 3 We will seek appropriate disclosure on ESG issues by the entities in which we invest.
- 4 We will promote positive and constructive engagement of the financial community on ESG issues.
- 5 We will work together to enhance our effectiveness in implementing the Principles.
- 6 We will seek to report on our activities and progress towards implementing the Principles.



기업과 사회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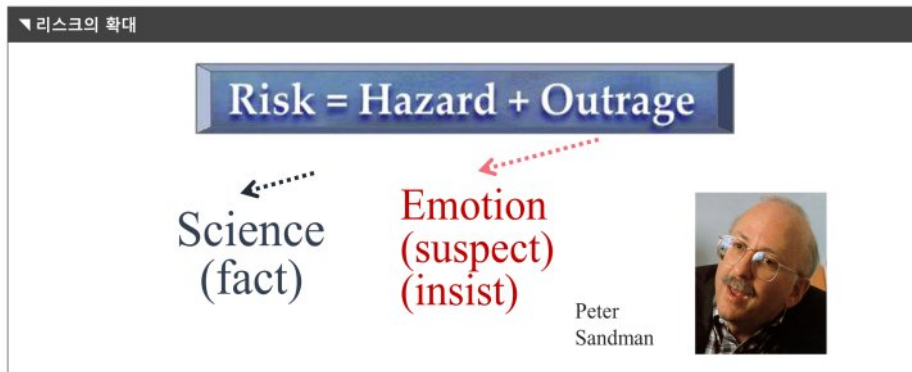
(출처: ISO26000)

5

기업의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

- ▶ 기술 발전, 사회 고도화, 집적화, 복합화 등으로 인해 객관적 위해 크기가 증가, 동시에 환경, 사회 등에 대한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로 기업 활동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노의 크기도 증가
- ▶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기업의 수익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피해배상, 매출감소 등)의 크기가 증가하고, 투자자는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기업의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기업의 성과는 투자자의사결정에 반영

▶ 리스크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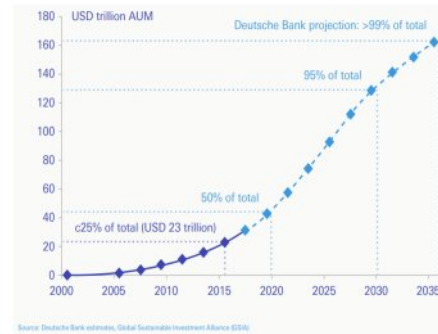


6

ESG 금융 규모 및 전망

자본의 대이동

- (글로벌) GSIA의 ESG 투자 규모 = 35조3000억 달러(2020년)
* 전세계 AUM(운용자산)의 35.9% 차지
- (글로벌) 도이치뱅크의 전망 = 2035년까지 160조 달러로 성장
- (한국) : ESG 금융 규모 = 531조원
* ESG투자, ESG 채권, ESG대출, ESG 금융상품 포함



7

Table of Contents

01 ESG 등장 배경

02 ESG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변화

03 ESG 기본법 제정 필요성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



UN MDGs와 SDGs 비교

구분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1-2015)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6-2030)
구성	· 8개 목표, 21개 세부목표	·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대상	· 개도국	·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를 포함(보편성)
분야	· 빈곤, 의료 등 사회분야 중심	· 경제성장, 기후변화 등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발전 고려
참여	· 정부중심	·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민간 이해관계자 참여
재원	· ODA 재원 중심	· ODA를 포함하는 공공 및 민간 재원

(출처: 지속가능발전포럼)

9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ESG/기후변화

Executive Order on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MAY 20, 2021 • PRESIDENTIAL ACTIONS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hereby ordered as follows:

Section 1. Policy. The intensifying impacts of climate change present physical risk to assets, publicly traded securities, private investments, and companies — such as increased extreme weather risk leading to supply chain disruptions. In addition, the global shift away from carbon-intensive energy sources and industrial processes presents transition risk to many companies, communities, and workers. At the same time, this global shift presents generational opportunities to enhance U.S.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growth, while also creating well-paying job opportunities for workers. The failure of financial institutions to appropriately and adequately account for and measure these physical and transition risks threatens the competitiveness

(출처: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5/20/executive-order-on-climate-related-financial-risk/>)

REUTERS World Business Markets Sustainability Legal Breakingviews Technology Investor

Biden uses first veto to defend rule on ESG investing

Reuters
March 27, 2023 4:12 AM GMT+8 Updated 4 months a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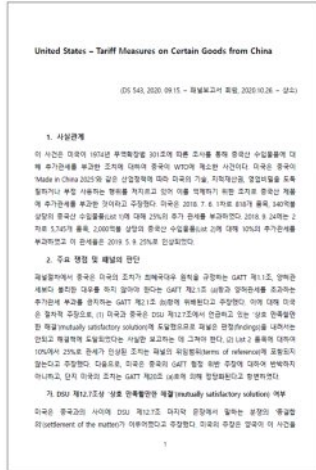
U.S. President Joe Biden speaks at the White House. Lyle Seidman, The Washington Post, March 27, 2023. REUTERS/Chris Wedel

WASHINGTON, March 20 (Reuters) - U.S. President Joe Biden on Monday rejected a Republican proposal to prevent pension fund managers from basing investment decisions on factors like climate change, in the

10

ESG, 미·중 패권전쟁을 위한 미국의 무기

-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미·중 관세분쟁의 경우에도, 미국은 WTO에서 20조 일반적 예외 (a) 적용 주장
- 미국은 무역 조치와 일반적 예외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로, 인권, 기후변화 이슈 등을 패권전쟁의 도구로 활용 전망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다음의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계약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a)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b)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c) 고도소노동상품과 관련된 조치

11

ESG, 미·중 패권전쟁을 위한 미국의 무기

- 미국은 인권을 문제로 중국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시행



표 1.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구성

구분	주요 내용
1. 강제노동 규제 관련 정책의 취지 및 추진 의지	- 1930년 관세법 307조에 의거,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금지 강화와 강제노동 관행 근절을 위한 국내외 노력, USMCA 협정 23.6조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협조 등이 미국의 주요 정책 사항임을 강조 - 고문, 구금, 강제노동, 소수민족 및 종교인명 등의 관행 행위 방지 노력을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 것으로 인식 - 양자간 외교 채널 및 다자기구, 비자 및 금융제재·수출 제한 및 수입통제 등의 수단을 통한 강제노동 문제 해결 의지 강조
2.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집행을 위한 전략	- '2. 나'에서 별도 설명
3. 신장위구르자치구 또는 특정 단체에서 제공, 생산 또는 제조한 제품의 수입금지	- '2. 다'에서 별도 설명
4. 강제노동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전략	- 신장위구르자치구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와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 보고서 작성 및 적절한 의회 위원회에 보고(국무부 장관 담당)
5. 강제노동 관련 제재 부과	- '2. 라'에서 별도 설명
6. 법률조항	- 3조, 4조, 5조의 효과 소멸에 대한 규정
7. 정의	-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제시 - 적절한 의회 위원회: [미 하원] 과두위·계두위·세입위·국도안보위, [미 상원] 외교위·군행수책도위와 재무위·국도안보 및 정부위 - 강제노동: 처벌의 위협하에 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동 및 용역을 의미(제조자 노동, 제련노동 및 아동노동 포함) - 자: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Public Law: 117-78)를 통칭하여 지칭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포커스 2022년 6월호)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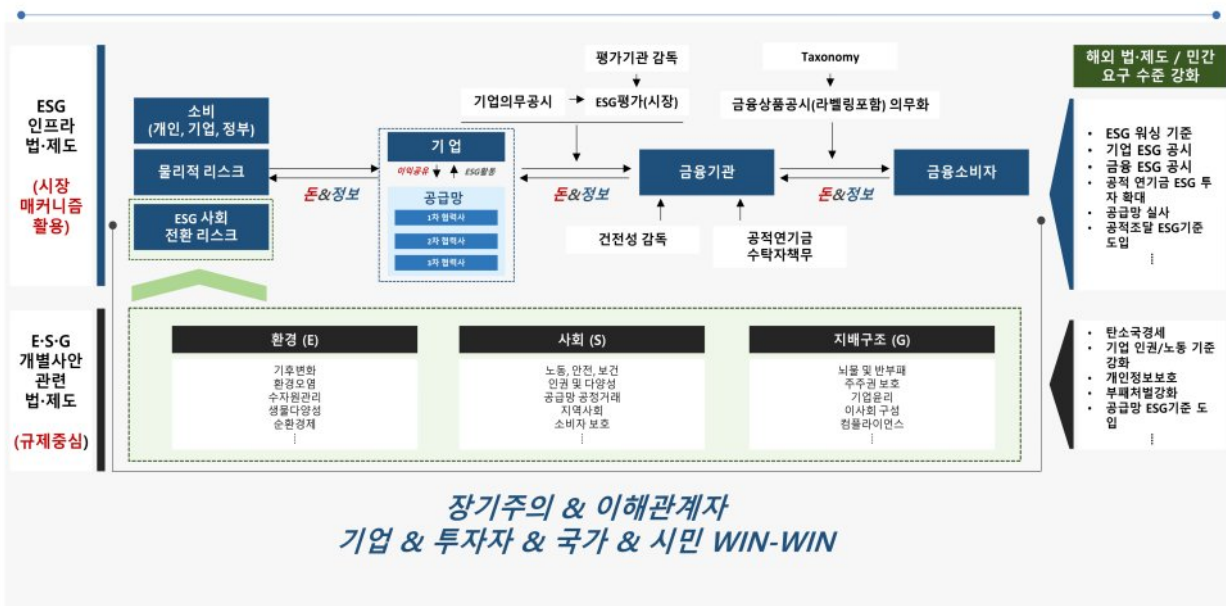
ESG 관련 국가(정부)의 역할과 인프라 제도 도입

- ESG의 확산은 국가전체의 경제, 환경, 사회적 편익을 증진
- 오늘날,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의 ESG 관련 이슈는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제와 직결
- ESG의 핵심은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에 자본이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 (기업은 재무성과, 투자자는 투자수익, 국가와 시민은 환경 및 사회문제 해결)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것
- 최근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해 ESG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기 위한 법·제도 및 계획 수립 국가 증가

대 상	주요 제도
소비자-기업	· 개인소비자: 환경라벨링 제도, 그린워싱 방지제도 · 공적조달: 미국 연방조달 CDP 및 SBTi 반영, 녹색
기업-공급망	· EU 공급망 실사 지침
기업-투자자	· ESG 공시 의무화: 미국 SEC 기후공시지침 / EU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 / IFRS ISSB · 스튜어드십코드: 영국, 미국, 일본, 한국 등 · 연기금의 ESG 투자 의무 및 자율 고려: 영국, 프랑스, 한국 등
투자자-금융소비자	· 미국 펀드이름법 · EU SFDR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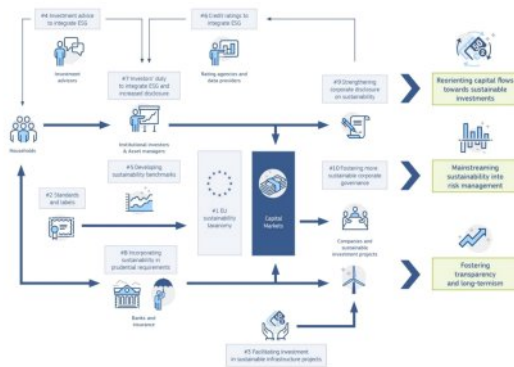
ESG 작동원리와 제도 유형



14

1) 포괄적 ESG 인프라 제도 도입

- 인프라차원의 법·제도는 과거 산발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전체 흐름을 연결하여 ESG 선순환 고리를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 차원의 접근 증가, EU의 CSR전략과 지속가능금융액션플랜이 대표적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자본흐름 유도

- 1)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EU차원의 분류표준 시스템 개발
- 2) 지속가능 또는 녹색금융 상품 표준 및 라벨링 개발
- 3)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도 및 확대
- 4) 금융관련 자본 제공 시, 지속가능성 이슈 반영
- 5) 지속가능성 관련 벤치마크 개발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를 리스크 관리의 핵심에 반영

- 6) 시장조사분석 및 신용평가에 지속가능성 반영
- 7)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무 명확화
- 8) 연기금, 은행, 보험사의 감독체계에 지속가능성 반영

금융의 투명성 및 장기주의 확산

- 9) 지속가능성 이슈 공시 강화 및 회계표준 반영
- 10) 기업 지배구조의 지속가능성 향상 및 자본 시장의 단기주의 압력 완화

(출처: EU집행위원회)

15

2) E·S·G 개별사안 법·제도 강화

- E·S·G 개별 사안 (환경, 노동, 인권, 안전 등)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이슈로 ESG분야는 무관하게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도입 및 강화 되어 옴
- 최근 시민의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와 기타 환경 및 사회요소에 대한 기대수준이 올라가면서, 기업을 둘러싼 환경, 안전, 인권 등의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
- 다만 과거와 특징은, 개별 국가의 법, 제도 도입의 영향력이 해당 국가에만 머무르지 않고, ESG라는 채널을 통해 다른 나라의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점
- 최근 ESG경영과 투자가 일반화되면서,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은 공급망 기업과 투자대상기업에 해당국의 법규 준수가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 즉 미국이나 유럽 수준의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수준을 요구하기 시작
- 또한, ESG를 무역전쟁의 명분으로 활용되는 흐름도 나타남
- 공급망 실사제도, 탄소가격제도(국경세 포함), IRA 등이 대표적

16

Table of Contents

01 ESG 등장 배경

02 ESG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변화

03 ESG 기본법 제정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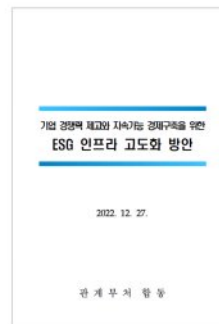
국내 ESG 법·제도 현황

- ESG 관련 여러 법, 제도, 계획이 발표되고 있으나, ESG의 핵심인 '소비자-기업-금융기관-금융소비자' 사이의 돈과 정보의 흐름을 통괄하는 형태의 법, 제도는 미비
- 사실상 사회경제 시스템 전 영역을 다루는 ESG의 특성으로 인해, 여러 상임위원회 및 정부 부처가 ESG 가운데 특정 영역에 대한 법/제도를 산발적으로 발의 및 발표
- 2022년 발표된 'ESG인프라고도화 방안'도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정책을 종합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 하지만, ESG에 대한 국가차원의 비전 및 체계적 전략과 이를 조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음

 환경노동위원회	 정부위원회	 기획재정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부위원회	기획재정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60	28	17	12	10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7	4	1	1	1

(출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생태계 조성 및 입법정책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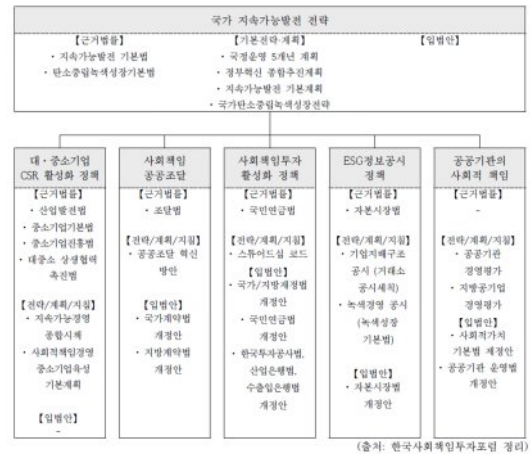


순 서	
I. 추진배경	1
II. 국내현황	2
III. 향후 정책추진 기본방향	3
IV. ESG 인프라 고도화 주요 정책과제	8
1. ESG 인프라 고도화 정책	8
2.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강화	8
3. ESG 투자 활성화	12
4. ESG 정보·전략·지배력 구축	13
5. 금융부문 ESG 경영·투자 선도	15
6. 수인체계	18
V. 기대효과	17
VI. 향후 추진계획	18

ESG 기본법 제정 필요성

- ▶ 최근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 기업과 금융기관의 활동 및 정부 정책은 늘어나고 있으나, ESG에 정확한 이해 및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성의 부재로 혼란이 가중
- ▶ 현 ESG 모멘텀을 사회전체 편익 증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ESG생태계' 관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 지정 및 체계적 정책 방향성과 전략 수립이 시급
- ▶ 특히, 미국의 IRA와 같이 해외 ESG 관련 제도 모니터링 및 국내 영향 분석 미비로 국내 기업 및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기 시작
- ▶ 미국과 유럽 등 서구 국가에서 환경 및 인권 등 ESG를 중국견제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기업에도 간접 피해 발생
- ▶ 2022년 정부부처합동으로 ESG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했으나, 여러 부처에서 제시하는 정책을 종합한 수준
- ▶ ESG는 장기적 과제로 5년 단임제의 국내 제도하에서는 정부차원의 계획보다는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법적 기반 절실
- ▶ ESG 정책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이해관계자로 하며, 경제시스템 전반을 다루어야 하므로 개별법적 접근보다는 기본법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국가차원의 지속가능성장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국가의 책무에 중점을 두고 있어 ESG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국내 ESG관련 법/제도 체계



19

21대 국회 발의 법안

21대 국회 발의 ESG 기본법 주요 내용

주요내용	조해진 의원안	이원욱 의원안
ESG 공시 의무화	민간기업을 포함한 '기업등'의 공시 의무화 (민간기업의 범위 미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의무공시기업에 한하여 ESG 공시 의무화
컨트롤타워	국가 환경·사회·거버넌스 위원회(대통령 소속)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혁신위원회(국무총리 소속)
기업 지원	'기업등'에 대한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조달, 조세, 부담금 상혜택	자발적 공시기업에 대한 공공시설 점유, 금융, 조달 및 조세 상혜택
공공금융기관의 자금공급	관련규정 부재	ESG 경영 선도 기업에 대한 한국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의 우선적 자금공급
연금기금의 우선 투자	관련규정 부재	자발적 공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등 연금기금의 우선투자
ESG 경영공시 기반 마련	검증기관,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기준 요건 마련	ESG 경영 검증기관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등록·표준평가지표 공고, 평가기관의 평가지표 공개 등 평가체계 마련
ESG 경영 지원기관	ESG 경영지원 전문기관	ESG 경영촉진센터
벌칙	관련규정 부재	검증보고서 거짓 작성, 비밀누설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검증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20

ESG 기본법 제정 방향 제안

「ESG 기본법안」 주요 내용(안)

- 총칙: 목적, 용어정의, 원칙 및 각 주체 별 책무(투자자, 기업, 소비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 ESG 국가 비전 및 추진 전략 수립과 전담기관(진흥/그린워싱 방지)
- ESG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
 - ESG 정보 생산-유통-관리 체계 구축 (정보공시, ESG 분류체계, ESG 평가 감독)
 - ESG 금융과 투자자보호 (공적금융 포함)
 - ESG 경영 및 공급망 관리 (공공조달 포함)
 - ESG 소비 (ESG 소비촉진 및 라벨링)
- ESG 선순환 사회 생태계 구축
 - ESG 사회적 신뢰 제고 (그린워싱 방지, 정부-기업-시민 사회적 논의 기구)
 - ESG 교육 및 인재양성 (ESG 학과 및 교육 커리큘럼 개발, 산학연계 강화, 중소기업 교육 체계 마련)
 - ESG 중심 좋은 일자리 창출 (ESG 우수기업 =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ESG 정보 활용 일자리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 ESG 중심 대·중소 동반성장체계)
 - 해외 ESG 규제 동향 파악 및 대응 지원 체계 구축 (산단 별 ESG 지원, 지역 별 수출 중심 산업 지원)

21

ESG 기본법 제정 방향 제안

ESG 국가전략 추진(안)



22

ESG 기본법에 대한 비판과 실제

ESG 기본법에 대한 비판

기업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ESG 경영이 의무화 또는 획일적 틀에 포섭될 소지

기업들에 새로운 규제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대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중소기업에게 비용 증가 등 부담이 될 가능성

⋮

실제 ESG 기본법은

새로운 규제 도입이 아닌, 기존에 도입된 ESG 관련 제도를 체계화 (중복 해소 및 보완)하고,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



기업에 ESG 경영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실제 ESG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선택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늘어나고 있는 해외 ESG 정책 및 이해관계자 요구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



23

감사합니다

토 론 문 1 |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

토 론 문 2 |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1. 현황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SG 공시의무화(CSRD) 등 각종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기업 자율에 맡겨지던 ESG가 점차 제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금융위를 중심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가 준비되고 있어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기업 자율에 맡겨지던 ESG가 최근 국내외에서 본격적으로 법제화/의무화 되면서 국내기업들에게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업들도 ESG를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준비하기에는 비용, 미흡한 ESG 인프라 등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기존에 수행해 본 경험 및 사례가 없는 ESG 공시가 선불리 의무화될 경우 많은 기업들의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이 ESG 공시 체계를 갖추기 전에 의무화되면 자회사 및 협력사의 ESG 데이터 신뢰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공시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EU 등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ESG 제도화를 살펴보면 환경·인권 보호뿐 아니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무역장벽을 세우려는 목적도 강합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가 EU와 같이 ESG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기업들에게 중복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ESG 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오늘 발제한 ESG 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기업에 ESG 경영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실제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선택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 제도화를 기업의 경쟁력 향상보다는 통상규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수출비중이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산업구조상 ESG 규제화보다는 해외 ESG 규제에 대한 기업 대응을 지원하는 방향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ESG 공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산화, 전문인력 채용, 컨설팅 등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노력만으로 ESG공시에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탄소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 정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업계 의견을 포함하여 KSSB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ESG 공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잘 정착되고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법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업에게 ESG 관련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사항들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되 교육 및 인재양성,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금융 및 행정지원 등 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책은 적극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토 론 문 3 |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장



국회ESG포럼 토론회 자료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4년 10월 2일

1. 정보 공시의 필요성

정보 공시와 기업가치

● 공시의 효과

- › 투자자와 대리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여 활발한 거래를 유발하는 유동성 효과
 - Verreochia(2001)
- › 투자자의 자산 가격 산정 정확도를 증가시킴
 - Lambert et al.(2007)
- › 정보 투명성과 주주의 감시비용 감소
 - Lombardo and Pagno(2002)

● 지속가능성 정보의 자발적 공개

- › 2000년 이후 미국 상장사의 CSR 관련 정보공개 급증의 배경 연구
 - Dhaliwal et al.(2011); 자기자본 절감 노력 유인
- ›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질과 시장 가격 반응
 - Guidry and Patten(2010); 횡단면 분석에서 보고서의 질이 우수할수록 긍정적인 시장 가격 반응 보임

중요한 정보의 의미

● 회계기준

- › 중요한(material) 정보는 해당 정보가 누락, 허위 혹은 왜곡 작성되었을 경우, 그 정보를 사용하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간주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 › IFRS S1 일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개 요구사항의 목적은 기업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데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에게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
- › 기업은 자사의 전망에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중요성은 기업 고유(entity-specific) 특성을 반영한다고 밝히고 있음
 - 따라서 지속가능성 중요한 정보는 추가 정보성에 반영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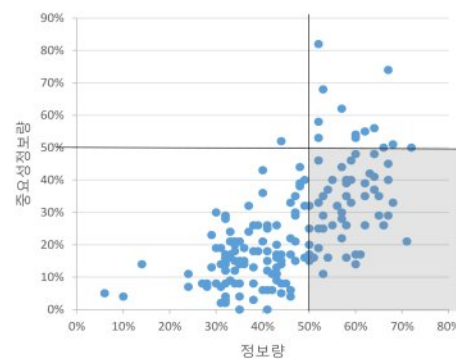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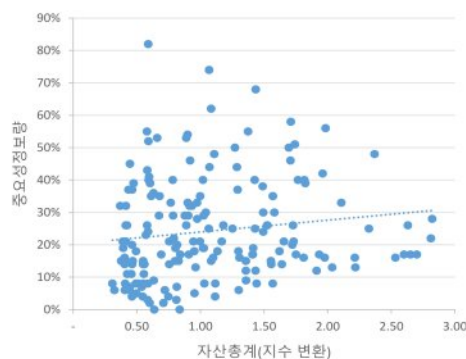
중요한 정보와 기업 고유 가격 정보성

- Grewal, Hauptmann, and Serafeim, 2021, "Material Sustainability Information and Stock Price Informativeness" J of Business Ethics
 - ▷ SASB 기준에 의한 중요한 정보의 공개 정도와 주가 정보성(기업 고유의 가격 정보)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증함
- 선우희연, 이상호, 이우종, 이인형, 2022, ESG 중요성 공시의 유용성, 회계학연구
 - ▷ 국내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주식시장 투자자의 반응이 중요성 기준에 근거한 ESG 공시 양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검증함
- 이상호, 유지연, 이인형, 정남철, 2023, 중요성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공시와 주가 정보성, 회계정보연구
 - ▷ 국내 기업의 중요성 기준 지속가능성 정보량과 주가 정보성 간의 관련성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중요성 정보 특성

- 중요성 관점에서 국내 상장사의 공시 현황을 파악을 해봄
 - ▷ SASB to Bloomberg Field Mapping 이용하여 자산총계 2조 이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조사
 - 정보량 평균은 46%, 중요성 정보량 평균은 24%



주: 정보량은 Bloomberg ESG Disclosure Score, 중요성 정보량은 개별 기업이 속한 산업의 중요성 지표 총 숫자 대비 정보가 존재하는 숫자 비율
자료: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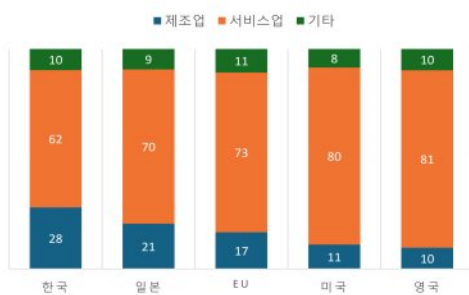
자본시장연구원

2. 기후관련 공시의 시급성

한국이 직면하는 도전과 기회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 중장기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 목표
 - ▶ '21년 배출량은 676.6 백만톤CO₂eq로 '18년 대비 6.7% 감소
-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Net-zero) 전환 과정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함
 - ▶ 한국은 OECD 국가 중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 의존도가 제일 높고, 산업 에너지원의 58%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음

각국의 업종 부가가치 기여도



자료: OECD, 한국전력, 산업통상부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 로드맵



자본시장연구원

탄소 중립을 위한 잠재된 전환 리스크

- 탄소 배출 비용은 주요 요소로, 기업들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비용을 내부화해야 함
 - NGFS(2023)*에 따르면, 기업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탄소 배출 비용은 \$200/tCO₂
 - 한국의 경우, 30대 고배출 기업의 94%가 무료로 배출 허용량을 할당 받아 실제 전환 비용 부담이 감소됨
 - 2021년 평균 탄소 허용 가격은 톤당 19,709원으로 약 7.9조 원에 해당.
 - NGFS의 그림자 탄소 가격 적용 시 약 96.8조 원으로, 이는 KOSPI 상장 기업 총 영업이익의 약 53%에 해당
-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절대적
 - 전환 비용 최소화 및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중요
 -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설정 필요

* NGFS, 2023, NGFS Scenarios for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Phase IV),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자본시장연구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 온실가스 감축 부문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중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6대 분야

산업	발전·에너지	수송	도시·건물	농업	이산화탄소포집
-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시멘트, 유기화학물 제조 -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 재생에너지 생산 - 수소·암모니아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 바이오 메스, 가스, 에탄올, 디젤, 중유 제조 - 전기, 열, 수소, 암모니아 에너지 저장	- 무공해 차량·철도·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 및 도입 -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 운영	-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개발 운영 -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 건축물 관련 온실 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 저탄소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 운영	- 저탄소 농업 - 저탄소 사료 및 대체가공식품 제조	-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유용성

- 탄소노미 적합 매출액과 자본/운영지출 정보로 기업의 탄소중립 성과 평가 가능
 - ▶ 탄소노미 적격 경제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크다면 현재의 탄소중립 달성 성과가 크다고 평가
 - ▶ 탄소노미 적격 경제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자본지출 비중이 크다면 미래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이행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음
- EU는 Taxonomy에 의한 적격 비율 공시가 의무화 됨

BASF의 2021 사업보고서 온실가스 감축 공시사례

구분	매출액	자본지출	운영지출
탄소노미 적격 비율(%)	11	29	11
EU 탄소노미 경제활동 명	3.14 유기화학제품 제조 3.17 1차 플라스틱 제조	3.4 배터리 제조 3.14 유기화학제품 제조	3.14 유기화학 제품 제조 3.17 1차 플라스틱 제조
탄소노미 적격 추진 사업	화학,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배터리 제조 투자	화학제품 제조 시설의 운영비용

자료: 손서원, 2022, 탄소노미 수혜 예상 업종과 기업 대응 전략, 삼성증권

 자본시장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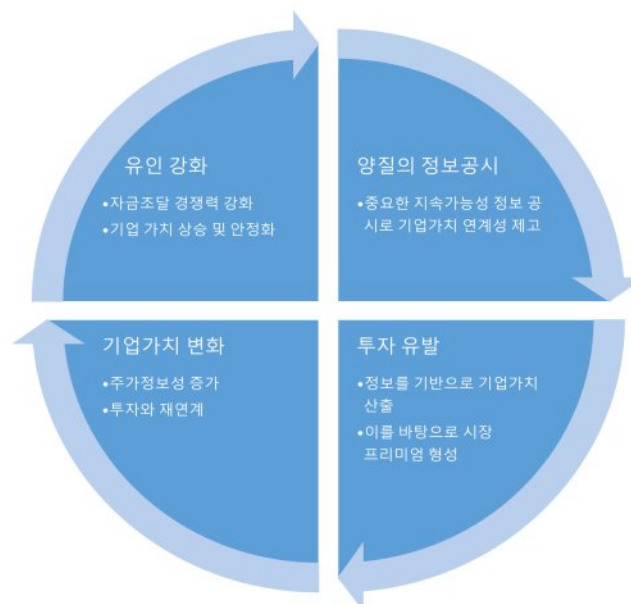
공시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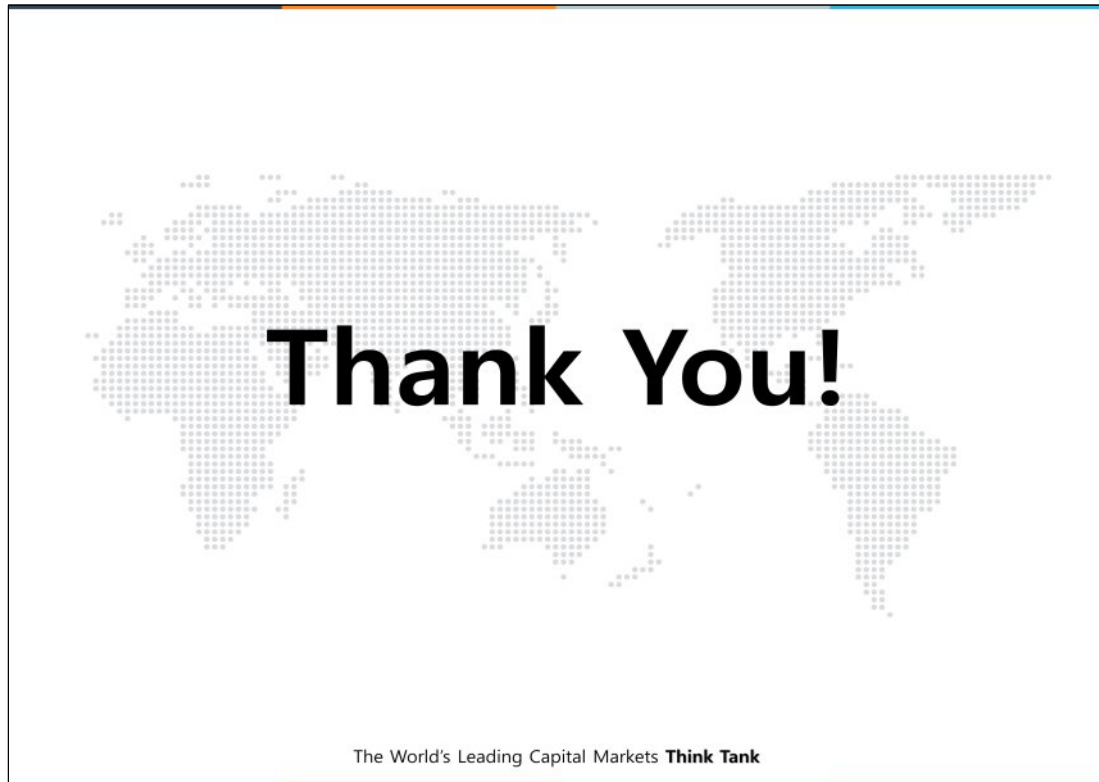
- 탄소노미에 기반한 기업 재무 정보의 공시로 보다 효과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해짐
 - ▶ 투자 및 대출 포트폴리오의 효과적 구성과 그린워싱 방지
 - 지원되는 금융의 녹색 적합도 측정 가능
 - EU의 금융서비스 부문의 지속가능성 공시 (SFDR) 규정은 EU 그린딜의 핵심 규정
 - ▶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 지속가능성 내부 투자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제공 가능
- 기업은 탄소노미 적합도가 자금 조달 경쟁력으로 작용
 - ▶ 공공금융 지원을 통한 자금 공급과 보증 및 민간 투자가 탄소노미 적합 기업과 경제활동에 우선지원
 - KDB탄소스프레드, KDB탄소넷제로 프로그램, 민간은행의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협약대출 등
 - ▶ 녹색채권, 전환채권의 사전 및 사후 적합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여 발행 비용 및 이자 비용 지원

 자본시장연구원

3. 유인부합적 공시를 위한 제언

공시, 투자, 기업가치 간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체계 마련





토 론 문 4 |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장

1. 국제사회와ESG의 흐름

□ ESG의 퇴조?

○ Anti-ESG

- Anti-ESG 흐름이 생기고 정쟁화되면서 ESG의 퇴조 또는 종말이 이야기되고 있음.

○ ESG의 심화

- 그러나 ESG는 시장의 흐름을 넘어 제도화되고 있고, ESG의 이슈는 다변화·각론화 되고 있으며, 자본시장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ESG 요구는 거세지고 있음.
- ESG는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배경으로 하는 바, 노동자, 공급망, 소비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힘이 커지고 기업에 대한 참여(engagement)가 강화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 단편적으로 ESG의 퇴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ESG의 제도화

○ 개괄

- ESG는 자본시장에서 시작되었으나, 이제 제도화·법제화되고 있음. ESG 제도화는 유럽이 주도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도 가세하면서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법제,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법제, 인권 및 환경실사에 관한 법제,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지속가능 무역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음.

○ 생태계 제도

- 지속가능 금융제도(택소노미 포함),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지속가능성 실사제도 등 지속가능성 생태계에 관한 제도가 유럽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제도화 되고 있음.

- 공시만 보더라도 유럽의CSRD와ESRS, IFRS재단의 ISSB를 비롯하여 제도화의 흐름은 가속되고 있어 기업이 재무공시 외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해야 하는 시대는 곧 도래할 것임(재무제표+ 지속가능성제표).

○ 영역별 규제

- 환경: 탄소국경조정제도, 순환경제를 위한 각종 규제, 배터리 규정, 산림벌채 규정, 에코디자인 등 환경규제는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사회: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규제, 분쟁광물 제도 등 인권 규제, 소비자의 권리(수리할 권리 등) 강화, 제품책임, 제품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 정보보안에 대한 규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거버넌스: G20/OECD 기업거버넌스 원칙, OECD 뇌물방지협약, 각국별 기업 지배 모범규준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등 기업의 거버넌스 규제도 강화됨.

- 무역: FTA에 환경, 인권, 노동챕터가 강화되는 등 지속가능성 규제는 무역 규범화되고 있고 통상문제로 되고 있음.

□ 글로벌 시장 및 공급망의 변화

○ 국제 자본시장의 변화

- 연기금을 포함한 국제적 투자기관들이 기업의 가치 및 지속가능성을 ESG와 연계하여 강조하는 흐름은 계속 강화되고 있음.

- 책임투자, ESG투자, 임팩트투자는 확대되고 있음. 아래는 PRI(책임투자원칙) 서명기관의 숫자추이.

연도	2006	2010	2015	2020	2024
PRI 서명기관수	63	734	1,384	3,038	5,344

○ 글로벌 가치사슬 및 국제거래와 ESG

- 글로벌 기업들도 가치사슬에서 환경관리, 지속가능성 실사를 강화하고 있어 국제거래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의 당면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 최근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공급망으로부터 환경경영, 인권경영에 관한 강력한 요구를 받고 있음. 대기업들은 법적 의무가 없는 RE100, 공급망 생활임금 등에 관한 정책까지 수립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거센 요구에 기인한 것임.

2. ESG제도화의 필요성

□ 현황

○ 한국의 경우ESG 제도화가 부족

- 한국의 경우ESG 공시를 2026년으로 예정했다가 미루고 있고, 국회에 발의되었던 인권환경실사법, ESG기본법 등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규제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있을 뿐 한국 차원의 적극적 생태계 조성 노력은 부족함.

- 지속가능사회를 이루기 위한 기업의 역할 확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종합적 발전전략)이 없음.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을 세우고, 각 분야의 제도화를 서로 연계하고 진행하고 있는 EU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경우에도 ESG 강화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일본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높은 의지를 가지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경제산업성, 책임 있는 공급망에서의 인권존중지침).

○ 국제시장 및 공급망에서 한국의 경쟁력 실추 위험

- ESG에 관한 준비와 추진을 미룰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되거나 글로벌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ESG를 추진하여야 함. 글로벌 통상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 ESG 법제화의 방향

○ ESG기본법 제정 또는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을 통한ESG 생태계 조성

- ESG 추진체계를 갖추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며, ESG를 실행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는 법률이 필요함. 그 방법으로 ESG기본법을 제정하거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가능함.

-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원칙과 방향, 국가 및 기업의 책무, 정부의 생태계 조성과 기업 지원에 관한 조항이 필요함. 아울러 ESG의 핵심은 지속가능금융의 활성화이므로 정부가 지속가능금융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ESG 공시법규의 체계화

- ESG 공시기준을 IFRS의 ISSB와 유럽의 ESRS를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하고 이를 법규화하며, 원활한 공시규정 작동을 위한 검증제도와 택소노미 제도를 구축하고, ESG위상을 방지하기 위한 법규를 보완하며, 금융기관의 공시에 관한 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음.

- 한국회계기준원이 KSSB 공시초안을 발표하였으나, ISSB만을 좇아 소극적인 범위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여러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지속가능성 실사법제 제정

- 지속가능성 실사를 의무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이를 입법화하여야 함(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의 일본, 인도, 태국 등도 기업과 인권 정책을 강화하거나 관련 규범화를 추진하고 있음).

- 지속가능성 실사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하며 관리하는 프로세스에 관한 법률이므로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기업의 위험관리 또는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필요함.

○ 국제적 수준으로의 환경법제 정비

- 유럽을 필두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우리도 환경역량 강화 및 국제 거래의 균형을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 순환경제 제도, 생물다양성 제도 등 다양한 환경제도를 구축하여야 함.

- 예를 들어 탄소세는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의 일본, 싱가포르, 대만, 인도네시아가 도입하였고,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그 밖에도 다양한 환경규제에 소극적 대응을 넘어 한국의 규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음.

3. ESG기본법에 대한 의견

□ 21대 국회 발의 ESG기본법의 주요내용

	조해진 의원안	이원욱 의원안
법명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
목적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여 ESG 경영과 투자를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경제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기업의 ESG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 이바지
체계	1장 총칙 2장 ESG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3장 ESG 공시 및 인증 등 4장 ESG위원회 5장 사회 전반의ESG 확산 보칙 부칙	1장 총칙 2장 ESG경영촉진 기본계획 등 3장 ESG경영촉진을 위한 금융기관의 업무 4장 ESG 평가 공시 등 5장 검증기관의 등록 등 6장 ESG경영 참여기업 지원 7장 ESG경영 촉진을 위한 기반구축 보칙, 벌칙, 부칙
컨트론타워	국가 환경·사회·거버넌스 위원회(대통령 소속) 지방 환경·사회·거버넌스 위원회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국무총리 소속)
국가계획	국가 ESG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지방 ESG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국가 ESG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속가능금융 및 투자	금융시장의 ESG 확산 시책 마련	ESG 관련 금융위험 최소화 감독시책 금융기관ESG 공시 권고 공공금융기관의 ESG 선도기업에 대한 우선적 자금공급, 보증 금융기관의ESG 금융사업 자발적 공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등 연금기금의 우선투자
ESG 공시 의무	기업 등의 공시의무화(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기업 등의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노력의무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공 정부의 ESG 우수기관 인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의무공시기업에 한하여 ESG 공시의무화
ESG 경영 공시기반 마련	검증기관,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기준 요건 마련	검증기관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등록 표준평가지표 공고, 평가기관 평가지표 공개
기업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ESG 지원 ESG경영 촉진을 위한 조달, 조세, 부담금 상 혜택	중소·벤처 및 중견기업 지원 자발적 공시기업에 대한 공공시설 점용, 금융, 조달 및 조세 상 혜택, 금융지원 시책 마련·시행
ESG경영 지원기관	ESG 경영지원 전문기관 지정	ESG 경영촉진센터의 지정
과징금, 벌칙 등	없음	검증보고서 거짓 작성, 비밀누설 및 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형 검증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ESG위상에 대한 조사 및 공표

□ ESG기본법에 대한 의견

○ 법률 명칭과 용어: ESG? 지속가능성?

- ESG는 투자자의 언어이고 국제사회에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를 더 사용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 또는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용어 사용이 어떨까? 법률명도 ‘지속가능경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좋을 듯.

- 국제사회의 흐름, EU 등 기존 입법례, 지속가능사회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와의 연계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고려, 기업의 수용가능성 측면 고려.

○ 법률의 형식과 방법

- 기존 안처럼 제정법으로 하는 방안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지속가능경영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 방안이 있을 듯.

- 지속가능경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요구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는 지속가능위원회의 역무 추가, 지속가능금융,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기본규정만 추가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제정법으로 처리함이 바람직함.

○ 기본원칙과 국가·기업의 책무

- 기본원칙과 방향을 잘 세우는 것이 기본법에서는 중요함. 이원욱 의원안에는 기본원칙 조항이 없는데 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

- 기본원칙에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화를 병행하는 균형이 필요함.

- 기업의 목적(이윤 추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익 고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추구), 기업과 이해관계와의 관계(기업이 주주, 근로자, 소비자, 공급망,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여 함), 기업과 환경·사회의 관계(기업에 대한 재무적 효과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해지 의원안의 내용 참조) 등에 관한 원칙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국가 및 기업과 지속가능사회와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도 기본원칙에 포함되어야 함. 정부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사회를 위하여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금융 및 경영을 촉진하여야 하고, 기업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 기본법은 각론적인 내용보다는 총론적인 내용을 담고,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 원칙적인 내용 위주로 담는 것이 바람직함.

○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 지속가능성 공시 및 검증 규정을 기본법에 포함할 지, 별도의 법률을 통해서 할 지 논의가 필요함. 기본법에 각론적인 공시제도를 두다 보니 기본법의 목적과는 달리 법률이 복잡해지고, 기업의 의무 및 벌칙 규정이 강화됨.

- 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경영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원칙, 생태계 조성, 지원 제도 등을 규정하고 공시, 실사, 그 밖의 각론적 내용은 별도의 법률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함.

- 지속가능성 공시는 이미 의무화하기로 한 상황이므로 법률 제정이 필요함 (거래소 공시로 하는 방법과 법정 공시로 하는 방법이 있으나 후자가 바람직함).

- 법정공시의 경우에도 ① 자본시장법 개정, ② 지속가능성 공시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방법이 있으나, 공개기업 대상으로 투자자 중심의 공시를 한다면 전자가 바람직하지만, 기업공개 여부를 떠나 기업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공시제도를 마련한다면 후자가 바람직함. 지속가능성 공시의 가장 선진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유럽 공시제도를 참고할 때 후자의 방안을 지지.

- KSSB 공시초안은 ISSB를 쫓고 있는 바,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한 다양한 국제적 흐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유럽의 공시기준을 포함하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흐름을 포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중중요성을 채택하여, ESG 분야의 개별 이유를 망라하는 내용으로 구축되어야 함.

		ISSB	CSRD
작성기관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재단)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유럽연합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성격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보고	지속가능성 보고(재무정보+ 비재무정보)
이용자		투자자	이해관계자
중요성 평가기준		재무중요성	이중중요성(영향중요성+ 재무중요성)
보고주제	일반	S1(일반 요구사항)	ESRS1(일반 요구사항), ESRS2(일반공시)
	E	S2(기후 관련 공시)	E1(기후변화), E2(오염), E3(물 및 해양자원), E4(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E5(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S		S1(자체인력), S2(가치사슬 노동자), S3(영향받는 지역사회), S4(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G		G1(기업행동)
핵심 개념		지속가능성 관련 기업의 위험과 기회	이중중요성(환경·사회에의 영향, 기업의 위험과 기회), 실사, 가치사슬

○ 컨트롤타워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함.

- 개인적 의견으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금융 및 경영의 지원 및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면 되고, 별도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까 의문임. 지속가능경영은 시장의 자율성이 중요하므로,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금융

-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규정은 지속가능사회 및 경영의 생태계 마련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기본법에서 그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관련한 정부의 역할 및 입법화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특히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금융의 공시, 평가제도를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함. 아울러 분류체계의 마련, 지속가능성에 관한 금융거래지표의 지정 등도 필요함.

1. 지속가능금융 촉진정책(액션플랜) 마련
2.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3. 지속가능금융의 공시, 평가 및 분류체계에 대한 사항

4. 지속가능금융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활성화 및 제고 방안

○ 지속가능한 공급망 육성

- 국제적 가치사슬 및 공급망에서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지속가능한 공급망 육성을 위한 조향이 필요함.

- 정부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인권 및 환경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1. 지속가능한 공급망 촉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2.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규범화 및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
3.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통한 인권 및 환경적 가치 제고 방안
4.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5.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체계 구축 및 확산 방안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토 론 문 5 |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정보분석센터장

1. 합리적 ESG 정보공개/공시제도의 도출

○ 지속가능한 발전/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상장기업의 ESG 경영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시장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시대에 기업은 부의 창출을 주로 담당하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기업의 부의 창출(과 분배과정 전반에 걸친 ESG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지속가능한 기업을 시장에서 선별하고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기업 ESG 정보가 적시에 충분하게 시장에 제공되어야만 ESG경영의 기본 인프라로서 기능하게 될 ESG 검증·인증기관이나 평가기관(및 의결권 자문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규율에 의한, 시장에 의한 ESG 경영이 가능합니다.

○ 현재 국내에서는 코스피시장 상장기업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2024년 488사 공시(금융사제외), 2026년 전체 상장사 의무화 예정).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코스닥시장 기업의 공시도 고려할 시기가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상당수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ESG포털 공시 기준으로 현재 200사 남짓).

○ 국제적으로는 기업의 ESG 정보공개 확대 및 표준화와 관련해서 IFRS(ISSB), EU, 미국 SEC 등에서 선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공시 내용(사항)의 상호 호환성에 관하여도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기업의 ESG 정보공개(공시)는 두말할 나위 없이 꼭 필요한 사항이나, 어떤 기업이 무슨 정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언제 어떻게 공시하게 할 것인지 결정하

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 즉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가장 적합한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설득과 이해의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제도 자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렇게 하여야만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ESG 평가기관, 평가시장의 조성 과 감독

○ ESG 정보공개 제도가 토대로서 잘 갖추어진다면 이제 ESG 평가기관, 기관 투자자 등의 적절한 역할과 기능이 필요합니다. 먼저 ESG 평가기관은 이해상충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 국내에서는 2023년 9월부터 자율규제로서 「ESG평가기관 가이드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이드스에서는 ESG 평가기관의 내부통제, 이해상충방지, 평가 방법론 공개 등 기본 틀에 있어서는 신용평가기관에 적용되는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의 기본 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특히 국내 ESG 평가기관(회사)과 관련하여 하나 더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ESG 평가시장은 해외의 상황과는 달리 아직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시장자체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작은 시장 규모라서 평가기관이 평가서비스 수입에 의존해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 ESG평가기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정보가 다양한 목적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근거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평가시장 자체의 조성 과 활성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평가결과 및 등급 등 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되게 하여야 하며, 정당한 댓가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장기업이 ESG 등급 등 평가결

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 특히 국내 규제체계와 경영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국내 평가기관 육성과 지원도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필요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감독과 관리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지원과 관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확인

○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한 역할을 할 또 하나의 주체는 기관투자자입니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ESG투자활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기금 등을 포함한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스튜어드십코드」를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관련 사항을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관투자자는, 기업의 다양한 경영의사결정 국면과 단계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과 긴밀하게 의사소통하여 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관투자자는 지속가능한 투자수익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관투자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본래 지향했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4. 맺음말

○ 최근 국내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결국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ESG경영의 주춧돌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이 되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위하

여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우리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ESG경영의 활성화와 성공은 결국 기업지배구조에서 시작하고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강조 드리며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 론 문 6 |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ESG기본법(안)이 제시되지 않은 관계로, 21대 국회에 발의된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안(이하 '기존법안')을 참고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함

1. ESG경영촉진 기본계획

○ 장기적 관점에서 ESG 정책방향과 체계적인 전략수립, 컨트롤 타워 역할의 필요성에 공감

-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지배구조 정책 분야를 보면, 정권의 성향과 국회의 구성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정책, 제도가 좌절되거나 본래 취지와 달리 변질되는 사태를 반복함(집중투표제, 주주대표소송 사실상 사문화 등)

- 중장기 목표에 따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로드맵을 마련하여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ESG경영 실태조사, 통계

○ ESG경영에 대한 외부감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ESG경영 실태조사와 통계 자료는 매우 유용한 정보이며 ESG경영의 지속적인 확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현재 공시되는 사업보고서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이 실태점검 결과와 통계 자료를 발표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조사 범위를 결정하여 시행하므로 일관된 기준에 따른 시계열 비교자료가 제공되지 않음

- 도교증권거래소는 기업들이 제출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교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 현황에 관한 각종 통계와 분석을 수행, 2007년부터 매년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 백서」를 발간

- ESG경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할 필요

3. 공공금융기관의 우선 자금공급, 연기금 우선적 투자 등

○ 기존법안은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금융기관의 우선 자금공급 및 보증제공(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기업의 중요 목표로 설정하여 노력하는 기업), 연금기금의 우선적 투자(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적극적인 기업)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공공금융기관 등의 설립근거 및 정책목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책임투자 전략에 따라 ESG통합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적용상 고려할 점

- ESG 경영을 “선도적으로 수행”, “중요 목표로 설정하여 노력”, “ESG 경영에 적극적” 등의 개념과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자의적인 적용 우려

- ESG경영을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회, 환경 관련 정보가 부족할 수 있으며, 지배구조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법령상 지배구조 규제(사외이사 비중, 위원회 설치 의무 등)를 받는 대기업들이 보다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

- ESG 관련 역량(재정)과 전문성 면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함

4. ESG정보 공시

○ ESG기본법에서 규정하는 ESG정보 공시의 내용

- 기존법안은 ESG경영 공시기준을 정부가 “국제회계기준재단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공시기준” 또는 “그 밖에 이법에 따라 정한 공시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기업은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ESG경영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

- IFRS 지속가능성 기준은 투자자에게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기후분야 기준이 최종 발표됨

○ 우리나라에서도 KSSB가 발표한 공시초안을 중심으로 IFRS 지속가능성 기준의 제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공시 의무화 대상 범위와 시기에는 이견이 있으나, 최소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회사는 1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외 기업들은 단계적으로 확대 될 전망

- KSSB 공시초안에서 필수로 되어 있는 기후정보 이외에 선택공시로 되어 있는 분야는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할 필요

○ 기존 법안대로 IFRS 지속가능성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법인의 의무공시 관련(의무화 대상 범위, 공시 항목 등) 사항은 공시 전반을 다루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이 경우 ESG기본법상 정보공시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기업들에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효과

○ 기존법안은 의무공시 대상이 아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공시(선언)하는 경우 운영 및 금융 지원으로 자율공시를 유도함

- 의무공시 범위 확대 여부에 따라 판단할 필요

- 자발적 공시 기업으로 명확히 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의무 부과